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석사학위논문

의원발의 법률안의 중복발의에 관한 연구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이 상 현

의원발의 법률안의 중복발의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병 섭

이 논문을 행정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3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이 상 현

이상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6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 초록

헌법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나, 과거의 국회는 입법부로서 법률을 만드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정책 과정을 정부가 주도해 왔었다. 민주화 이후에는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입법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하면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부제출 법률안을 양적으로 압도하고 있는데, 양적인 증가와는 달리 질적으로는 여전히 정부발의 법률안에 비해 의원발의 법률안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적인 저하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법률안의 가결률이 낮다는 현상에서 출발해서 그 질적 저하의 원인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방법은 실제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낮은 가결률만을 근거로 의원발의 법률안이 품질이 낮다고 전제한 뒤 논의를 진행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의 법률안의 처리 과정을 분석하여,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발의 법률안의 질적 차이를 실제 법률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대안 937건을 대상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적 저하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복 발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실제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부제출 법률안에 비해 품질이 낮은지 여부를 검증하고, Lowi의 정책 유형에 따른 중복발의의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중복발의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원발의 법률안은 정부제출 법률안과 대안을 이

루는 경우가 많고, 내용의 중복이 있을 때 의원발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또한, 의원발의 법률안끼리 대안을 구성할 때 또는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내용 전부가 중복되는 사례가 많아, 의원발의 법률안이 서로를 참조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고, 국회의원들은 전부개정과 같은 정교하고 난이도 있는 개정작업보다는 손쉽게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쪽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존 연구의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적 저하에 대한 지적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정책유형을 통한 중복발의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들은 특정 집단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법률을 적극적으로 발의하는 유인이 있으면서, 특정 집단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더라도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거나 일반적인 평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기꺼이 관련된 법률안을 중복하여 발의하고 있어, 중복발의는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전략적 행위라는 것이 나타났다. 한편, 정부 역시 특정 집단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정책 발의에 적극적이었고, 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법률안이 정부 주도로 통합되는 비율이 높았다는 점은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서 정부가 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의원발의 법률안은 질적으로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으나, 국회의원의 재선 추구가 계속되는 이상 입법과정의 통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통해 법률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이거나 밝혀낼 수 있었다.

주요어 : 의원입법, 중복발의, 정책유형, 가결률

학 번 : 2009-23680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5
제2장 의원발의 법률안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6
제1절 의원발의 법률안 현황	6
제2절 의원발의 법률안의 양적 증가에 대한 연구	7
제3절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적 저하에 대한 연구	9
I. 입법 과정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	9
1.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 과정	9
2.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법 과정	11
3. 입법 과정상의 차이점	14
II. 국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	17
III. 입법지원조직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	19
IV. 국회의원의 행태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	20
V. 낮은 가결률에 대한 다른 시각	22
VI.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기간에 대한 연구	23
제4절 의원발의 법률안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25
I. 국회 내부에서 개선 방안을 찾는 시각	25
II.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개선 방안을 찾는 시각	28
제5절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	29
I. 기존 연구의 한계	29
II. 가결률 통계가 가지는 함정	30
III. 중복발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32
제3장 연구 대상과 방법	35
제1절 중복발의 일반현황 연구	35
I. 연구대상	35

Ⅱ. 연구가설	39
제2절 정책유형에 따른 중복발의 현황 연구	43
Ⅰ. 연구방법	43
Ⅱ. 정책유형의 분류	45
Ⅲ. 법률안 분류	47
Ⅳ. 연구가설	49
 제4장 연구 결과	 51
제1절 제18대 국회 대안의 중복발의 현황	51
Ⅰ. 중복발의 비율	51
Ⅱ. 법률안 개정 형태에 따른 중복발의 비율	55
Ⅲ. 제안 시기에 따른 중복발의 비율	59
제2절 Lowi의 정책유형에 따른 중복발의 현황	68
Ⅰ. 정책유형에 따른 중복발의 현황	68
Ⅲ. 정책유형에 따른 대안의 통합 방식	71
 제5장 결론	 73
제1절 요약 및 정리	73
제2절 평가와 전망	79
 참고문헌	 83
 부록	 86
1. 제18대 국회 대안의 중복발의 분석 결과	86
2. 제18대 국회 대안 중 분배정책에 해당하는 법률안	142
3. 제18대 국회 대안 중 규제정책에 해당하는 법률안	146
4. 제18대 국회 대안 중 재분배정책에 해당하는 법률안	150
5. 제18대 국회 대안 중 구성정책에 해당하는 법률안	154
 Abstract	 157

표 목차

표 1	6
표 2	24
표 3	31
표 4	32
표 5	38
표 6	52
표 7	54
표 8	55
표 9	56
표 10	57
표 11	58
표 12	59
표 13	61
표 14	62
표 15	64
표 16	65
표 17	68
표 18	71

그림 목차

그림 1	60
그림 2	61
그림 3	6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의 구성, 권력의 행사, 정부 정책의 수행 등 국가의 제반 활동은 궁극적으로 법률의 형태를 갖추어서 국민들을 구속한다. 그러한 점에서 입법은 국가기능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 할 수 있고,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속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¹⁾ 국회는 헌법질서 내에서 가장 중심적인 입법기관이며, 헌법질서 내에서 적어도 ‘법률’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입법기능은 반드시 국회만이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헌법은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으로서의 입법권을 국회에 속하게 하고 있지만, 동시에 제52조에서 정부에 대해서도 법률안 제안권을 부여함으로써²⁾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다른 국가기관에 실질적인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³⁾

그런데 우리의 정치체제에서 과거의 국회는 입법부로서 법률을 만드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가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정책 과정을 주도하다가 민주화 이후에야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입법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입

1)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2)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3) 정극원, “의원입법 부실화의 원인과 내실화의 방안”, 세계헌법연구 제18권 2호. 2012, 278-279쪽

법 과정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증가 추세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는 정부제출 법률안의 수가 의원발의 법률안 수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이었고, 민주화 이후에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부제출 법률안을 양적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제1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5건의 법률안을 발의할 때 정부에서는 124건의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민주화가 시작된 제12대 국회부터는 의원 발의 법률안이 정부 제출 법률안보다 많아져 제18대 국회에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13,913건에 이를 때 정부제출 법률안은 1,693건에 머무르는 등 의원발의 법률안이 양적으로 ‘폭증’하고 있다.⁴⁾

이러한 의원발의 법률안의 양적인 증가의 다른 면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이 질적으로는 여전히 정부발의 법률안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주로 법률안의 통과 현황에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부터 민주화 이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의원발의 법률안의 통과 비율은 정부발의 법률안의 통과 비율보다 낮았고, 민주화 이후 의원발의 법률안이 폭증하면서 그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11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이 41%에 머물 때 정부 제출 법률안은 90%의 가결률을 보였고, 제18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은 13.6%에 불과하나 정부 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은 40.8%로 나타나고 있다.⁵⁾

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참조

5) 정극원, 앞의 논문, 281-283쪽

법률안의 가결률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국회의원의 입법이 질이 낮다고 한다면, 이는 국회가 여전히 그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다.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국회를 통해 제대로 대표되는지가 불분명하여 국민주권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한편,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발의 법률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적 저하 원인을 논의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낮은 가결률을 근거로 의원발의 법률안이 품질이 낮다고 전제 한 뒤 논의를 진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적 저하의 원인과 해결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법률안의 질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 없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결률의 차이만을 보고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을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안의 가결률이 간접적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가결률이 낮다는 현상만을 바탕으로 의원입법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실제 법률안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관념적으로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은 그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의 법률안의 처리 과정을 분석하고,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발의 법률안의 질적 차이를 실제 법률안을 통해 드러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첫 단계로,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인 법률안 중복 발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실제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부제출 법

률안에 비해 품질이 낮은지 여부를 실증해보고자 한다.

한편, 법률안의 중복발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적 저하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발의 건수를 늘이기 위하여 현행 법률의 몇 개 조문만을 고쳐서 개정법률안을 제출한다거나, 다른 법률안을 베낀 듯한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다른 법률안과 거의 동일한 법률안을 중복해서 제출하기도 하는 등 유사한 법률안의 중복 제출이 만연하고 있고, 이를 억제할 법률적·현실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⁶⁾ 질적으로 낮은 법률안이 국회로 유입된다는 것이다. 만약,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부제출 법률안에 비해 품질이 낮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원인인 중복발의의 발생 형태에 대한 분석도 추가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중복발의가 어떤 경우에 만연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면, 중복발의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입법 법률안의 질적 차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중복발의 법률안의 처리 과정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그 후, 정책 유형에 따른 중복발의의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중복발의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려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증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논의에서 제시하는 법률안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처방이 유효한지를 검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입법 활동을 위한 방향을 찾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6) 홍완식,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2008, 107-108쪽

제2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원발의 입법의 양적 증가와 질적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법률안 중복발의의 처리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는데, 제18대 국회에서 제안된 상임위원회 대안 중 실제로 중복발의가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본 후, 중복발의가 발생했을 때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발의 법률안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양자의 질적인 차이를 가늠해볼 것이다.

둘째, 중복발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의 유형에 따라 법률안 중복발의가 발생하는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법률을 정책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정책 유형이 가지는 특징에 따라 중복발의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2장 의원발의 법률안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제1절 의원발의 법률안 현황

<표1> 제헌국회부터 제18대국회까지의 법률안 처리 현황⁷⁾

시기 구분(연도)	전체 법률안	의원발의 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		
		제출 건수	가결 건수	가결률	제출 건수	가결 건수	가결률
제헌국회(48~50)	234	89	43	48%	145	106	73%
제2대(50~54)	398	182	77	42%	216	137	63%
제3대(54~58)	410	169	72	43%	241	85	35%
제4대(58~60)	322	120	31	26%	202	44	22%
제5대(60~61)	296	137	30	22%	159	40	25%
국가재건최고회의(61~63)	1162	554	514	93%	608	501	82%
제6대(63~67)	658	416	178	43%	242	154	64%
제7대(67~71)	535	244	123	50%	291	234	80%
제8대(71~72)	138	43	6	14%	95	33	35%
제9대(73~79)	633	154	84	55%	479	460	96%
제10대(79~80)	129	5	3	60%	124	97	78%
국가보위입법회의(80~81)	189	33	33	100%	156	156	100%
제11대(81~85)	498	202	83	41%	287	257	90%
제12대(85~88)	379	211	66	31%	168	156	93%
제13대(88~92)	938	570	164	29%	368	321	87%
제14대(92~96)	902	321	119	37%	581	537	92%
제15대(96~00)	1,951	1,144	461	40%	807	659	82%
제16대(00~04)	2,507	1,912	516	27%	595	431	72%

제17대(04~08)	7,389	6,387	1,350	21%	1,102	563	51%
제18대(08~12)	13,913	12,220	1,663	13.6%	1,693	690	40.8%

민주화 이후인 제13대 국회 이후의 법률안 제출 및 통과 양상을 <표 1>을 통해 보면, 법률안의 제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의원발의 법률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법률안의 가결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의원발의 법률안은 정부발의 법률안에 비해 일관되게 낮은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제2절 의원발의 법률안의 양적 증가에 대한 연구

의원발의 법률안의 폭증 원인으로는 먼저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과거 정치적인 것에서 벗어나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언론과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로서 법률안 발의를 그 잣대로 삼게 됨에 따라 의원들이 앞 다투어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발의법률에 공동발의의 형태로 참가하면서 발의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법률안 발의를 위한 발언 정족수가 국회의원 20명에서 국회의원 10명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의원발의 입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어도 교섭단체 크기의 원내세력에게만 법률안제출권을 줌으로써 법률안 제출의 남발을 막으려던 제도를 바꾼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이 의원발의 법률안을 증가하게 한 요

7) 정극원, 앞의 논문, 282쪽의 표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참조하여 수정

인이 될 수 있다.⁸⁾

또한 현재 제안되었거나 논의 중인 법안 중에 실효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여 폐기된 것을 약간의 자구 수정만 거쳐 다시 제안한 것이 많은데, 이러한 법률 개정안들은 이미 존재하는 법과 제도를 잘 운영해도 되는 것이 많고,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들을 다른 의원들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중복발의가 많아진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⁹⁾ 중복발의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신들의 의정 활동에 대하여 알리고 이를 통하여 다음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중복발의의 대표적인 것이 상가에 대한 투자비용은 증가되는데 임차기간이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못하여 임차인들이 시설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안이 제15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되었다 폐기된 사례이다. 그 후 제16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여 상가등 비주거용 건물 임대차 보호법안(이재오 대표발의, 법안 160674호, 2001. 3. 20.), 상가 임대차 보호법안(송영길 대표발의, 법안 160714호, 2001. 4. 13.), 상가등 비주거용 건물 임대차 보호법안(이주영 대표발의, 법안 160850호, 2001. 6. 25.)이 발의되었고, 대안으로 통합되어 법률 제6542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된 후, 제정된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조배숙 대표발의, 법안 161604호, 2002. 6. 26.)이 발의되어 법률이 개정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비슷한 법률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의되는 것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영세한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섰다는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임대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8) 정극원, 앞의 논문, 285쪽

9) 고문현, “국회입법기능의 정상화와 역할 강화방안”, 법학논고 제46집, 2014, 138쪽

제기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었다.¹⁰⁾

근본적으로, 이러한 의원발의 법률안의 양적 증가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사전적·질적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적·양적 평가에 의하여 국회의원 개인이 발의한 법안의 개수만을 대상으로 입법활동을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¹⁾

제3절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적 저하에 대한 연구

I. 입법 과정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적 저하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의 분석이 존재하는데, 의원발의 입법 과정과 정부제출 입법 과정의 차이로 인해 법률로 통과되기 어려운 수준의 법률안이 의원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되고, 그로 인하여 법률안의 가결률이 낮아진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원발의 입법 과정과 정부제출 입법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고, 양자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 과정

의원발의 입법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에서는 의원발의 입법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의안발의 요건만을 둔 채(「국회법」 제79조제1항¹²⁾), 법률안 발의의 경우 일반의안과

10) 전학선,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의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07, 44-45쪽

11) 고문현, 앞의 논문, 138쪽

구별하여 발의자와 찬성자만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같은 조 제3항¹³⁾). 따라서 의원발의 법률안이란 1명 이상의 특정 의원이 입법 동기를 가지고 특정 법률 제정을 목적으로 법률안을 발의하고, 발의 의원 외의 다른 9명 이상 의원의 찬성을 받아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¹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국회법 제79조의2제1항¹⁵⁾),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인 경우로 조세특례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9조의3제1항¹⁶⁾). 한편, 위원장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82조의2제1항¹⁷⁾), 실제로는 입법예고제가 의무가 아닌 임의적으로 운영되

-
- 12)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13) ③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정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 14) 최윤철, 의원입법 질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제19대 국회 의원입법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2012, 6면
- 15)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6)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① 의원 또는 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17)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

고 있다.¹⁸⁾

법률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하며, 위원회에 상정되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질의·답변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후,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연석회의·공청회를 거친 뒤, 축조심사와 찬반토론을 거쳐 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받고 나서 본회의 심사보고가 이루어진다.¹⁹⁾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고, 법제처가 법률을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국무회의 심의·의결된 법률 공포안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 부서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되며, 비로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²⁰⁾

2.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법 과정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률안을 입안한다. 법률을 입안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에서 통보하는 입법계획의 작성방법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8) 홍완식, 앞의 논문, 111쪽

19) 박영원, “의원입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2014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2014, 26쪽

20) 법제처(편), 『법제업무편람』, 법제처, 2013, 2-3쪽

등에 따라 해당 연도 주요 업무계획 등의 추진에 필요한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하고(「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²¹⁾), 법제처에서는 이러한 부처 입법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한다(같은 규정 제8조²²⁾). 입안된 법률안은 그 시행 과정에서 타 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듣는데(같은 규정 제11조제1항²³⁾),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상의 의견회신 기간을 주어야 한다(같은 규정 제11조제4항²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서 당초의 원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법률안을 확정하면 법률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공개하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행정절차법」 제41조²⁵⁾),

21) 제5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 ① 법제처장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의 작성방법, 제출 시기,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연도 주요 업무계획 등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안의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중복·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23)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령안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24)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의견회신기간을 줄일 수 있다.

25)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하고(같은 법 제43조²⁶⁾), 입법예고 외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45조²⁷⁾). 이 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판단 하에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보완된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고(「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²⁸⁾), 규제심사 외의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각종 평가도 법제처에 심사의뢰를 요청하기 전까지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마치고 나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 의뢰된 법령안은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 등을 거쳐 법제처장의 결재를 받으면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다. 법제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의결(헌법 제89조제3호²⁹⁾) 후

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을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26)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27) 제45조(공청회) ①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28)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29)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마치면 대통령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다.³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심사 절차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절차와 동일하다.

3. 입법 과정상의 차이점

의원발의 입법과 정부제출 입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과 조정 절차를 거쳤는지가 가장 드러나는 차이라 할 수 있다.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법률안을 입안할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회 법제실에서 입법 아이디어를 법률의 형태로 전환하고, 법률 초안을 제공하며,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는 있다. 하지만 법제실의 심의 절차는 의무사항이 아닌 의원의 자발적인 조치로, 해당 법률안이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거나 입법과정에 논란이 예상되는 법률안이란 해석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³¹⁾ 해당 절차가 법률안 발의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정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달리 정부제출 입법은 부처협의 절차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후, 규제심사 등 다양한 평가를 거친 후에야 법제처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법제처 심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부제출 법률안에 비해 간소한 발의 절차를 가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정부제출 법률안은 다양한 기관과 절차를 거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30) 법제처(편), 앞의 책, 같은 쪽

31) 이현출·김준석, “가결과 부결의 이분법을 넘어: 17대 국회의 입법시간과 처리결과에 대한 경쟁위험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제5호, 2012, 138-139쪽

의견을 청취하고 수정할 기회를 가지게 되고, 입법예고와 규제영향 심사
 시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강제되고 있다.
 반면,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과거에는 「국회법」 제82조의2의 입법예
 고 조항이 있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소관 위원회의 재량으로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실효성이 없었다.³²⁾ 현재는 이 조항을 개정하여
 의무제로 하기는 하였지만, 입법예고에 있어서도 역시 규제영향분석서와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에 대한 전문가 등의 견해가 반영되는데 비
 하여 규제에 의한 영향이나 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고, 규
 제의 신설·강화시에도 별달리 공론의 장을 열 가능성이 없다는 문제점
 이 있다.³³⁾

다음으로, 정부입법의 경우 법제처를 거치게 되는데, 법제처 심사에 있
 어서는 상위법 및 다른 법안과의 모순관계, 관계기관과의 협의 여부 등
 에 대하여 검토·심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국회 법제실 심사의 경우
 에는 임의적 선택사항으로서 주로 의원실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법안
 형식의 문구 작성을 지원해 주는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사전
 심사라는 측면보다는 ‘입법지원’의 기능에 중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제출 법률안과 비교하여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면서 의
 원발의 법률안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관련 부처 협
 의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발의 단계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법제
 사법위원회 심사 등 입법과정 전반에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는데, 특히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관계되는 부처 간의 이견이 조정되
 지 않은 상태에서 발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관련 부처의

32) 구 「국회법」(법률 제1065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입법예고) ①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주요내용등
 을 국회공보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
 의하여 예고할 수 있다.

33) 고문현, 앞의 논문, 136-137쪽

반대 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발의되면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어떤 경우에는 관련 부처가 반대하는 채로 통과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현행 국회의 심사 과정은 법안을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간에 또는 정부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할 기구나 절차가 거의 없다. 비록 제도적으로는 연석회의(「국회법」 제63조³⁴⁾)나 전원위원회 제도(같은 법 제63조의2³⁵⁾)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 상임위원회가 관련위원회로 지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으나(같은 법 제83조³⁶⁾),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34) 제63조(연석회의) ①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④ 세입예산안과 관련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35) 제63조의2(전원위원회) ①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등 주요의안의 본회의상정전이나 본회의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③ 전원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한다.

④ 전원위원회는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⑥ 기타 전원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36) 제83조(관련위원회회부) ① 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³⁷⁾

이처럼 의원발의 입법과정은 정부제출 입법과정에 비하여 미흡한 의견 청취, 임의적이고 지원 위주의 법률안 심사, 부처 협의 과정의 미비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그 때문에 의원발의 법률안은 정부제출 법률안에 비하여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특정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³⁸⁾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하여 현실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법률안 또는 지역구 민원해결이나 이익단체의 로비에 의한 법률안, 법제 기술상 완성도가 미흡한 법률안³⁹⁾ 또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안 발의가 이루어지게 되고,⁴⁰⁾ 이와 같은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II. 국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

국회에 법률이 제출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제출된 이후의 심의 과정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먼저, 입법과정의 민주적 절차가 상실되는 경우가 결렬률이 낮아질 수 있는데, 실제적 정의에 해당하는 규범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에 해당하는 입법형식에서의 정의가

③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2항의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④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소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련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37) 서기영, “세법 입법과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30-31쪽

38) 서기영, 앞의 논문, 2008, 22-25쪽

39) 고문현, 앞의 논문, 137쪽

40) 전학선, 앞의 논문, 43쪽

먼저 실현되어야 하고, 절차적 정의는 현재의 다양한 국민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법률은 정당한 법률일 수 없다는 것이다.⁴¹⁾ 예컨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입법절차에서 다수자의 강압에 의해 토론과 대화가 생략된다면 이는 절차적 적법절차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되어 절차적 적법절차 위반으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⁴²⁾ 최종적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본회의까지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국 그 법률안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기도 한다.

법률안 처리에 있어서 국회의 비효율적인 행태를 문제로 지적할 수도 있다. 국회는 매 짝수 월에 법안심사를 하는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있음에도 제출된 법률안의 심사 시기가 9월 정기국회로 집중됨으로써 짧은 시기에 많은 법률안을 검토하고 과다처리하다 보니 졸속입법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법정화되어 있는 안전처리에 그 기간의 대부분을 소화해야 하는 정기국회에 법률안 제출이 편중되는 경우 짧은 심사기간으로 인하여 처리해야 할 법률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지는 것이다. 특히, 제안된 법률안은 반드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회의 본회의는 법률안의 처리뿐만 아니라 대정부질문 등의 중요 국정현안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고, 법안의 처리에 있어서 정당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폐회를 앞둔 시점에서 무더기로 법률안을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는 최근에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제13대 국회에서 38건을 처리한 경우가 있었고, 제14대 국회에서는 70건,

41) 홍익표,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입법절차상의 적법절차”, 공법학연구 창간호, 1999, 172쪽 및 174쪽

42) 김경동, “의원입법의 민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97쪽

제15대 국회에서는 82건으로 늘었으며, 제16대 국회에서는 84건, 제17대 국회에서는 100건이 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제18대 국회에서는 국회입법 만료를 27일 앞두고 그 동안 미루어 놓았던 민생법안 66건을 하루에 한꺼번에 처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특정 시기에 법률안 제출이 편중되면서 국회에서는 많은 법률을 단기간에 처리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시간에 촉박한 졸속입법으로 이어져서 법률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를 다시 개정하는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⁴³⁾

이러한 시각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한 국회 공전, 졸속입법의 폐해 등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일 수는 있으나,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국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의 문제는 의원입법 법률안의 질적 저하에 대한 원인이라기보다는 국회의 입법 자체가 질적으로 저하되는 문제에 대한 원인이라 할 것이다.

III. 입법지원조직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

입법은 국회의 본질적인 권한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점점 전문화되고 복잡·다양화되는 현대 사회 현상을 쫓아서 입법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국회 내의 조직에서 입법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인력이나 전문성의 한계로 인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자체가 충분한 정보와 전문지식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시각도 있다.⁴⁴⁾ 이러한 문제가 앞

43) 정국원, 앞의 논문, 286-287쪽

44) 전학선, 앞의 논문, 47쪽

에서 본 의원발의 입법 과정과 결부되면서, 정부제출 법률안보다 질적으로 뒤지는 법률안이 의원발의를 통해 양산된다는 것이다. 즉, 입법지원조직의 문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입법과정의 문제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IV. 국회의원의 행태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

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입법에 있어서는 법의 일반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입법, 국민 전체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의 의원발의 입법의 질이 낮아진다는 시각이다.

대표적으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선거 1년 전에 확정되어야 할 선거구가 여야 간의 이해대립으로 말미암아 선거 2달 전에야 확정된 사례가 있고, 국회의원 보좌 인력을 9명으로 늘이는 법률안은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배우자 및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하는 법률안은 운영위에 2년 이상 계류하게 두어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사례도 들 수 있다. 국회가 자의적으로 모든 입법을 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많은 법률이 국민의 전체 의사와 달리 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⁴⁵⁾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도 의원발의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있어 개인의 의사와 식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에서 정한 당론에 따라 의원발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정당이 정한 당론에 소속의원들이 구속되어 자신의 견해에 따른 입법을 하지 못하는 경우

45) 정극원, 앞의 논문 287-288쪽

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때 합리성과 타당성은 덜 고려하고 오로지 집단적으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토론과 절차를 생략하거나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⁴⁶⁾

국회의원의 재선 추구 역시 의원입법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재선을 목표로 하는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입법을 위해서는 지역구의 선호나 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⁴⁷⁾ 임기 중에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시적인 입법 활동을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많은 득표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 결과 국가이익과 법의 일반원칙을 무시하고서라도 오로지 정치적 고려에서 유권자의 입맛에 맞는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거나 전체적인 법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즉흥적으로 입법이 진행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예컨대, 2012년 2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위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 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지만, 이는 오로지 지역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법의 일반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면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입법이라 평가된다.⁴⁸⁾

이와 같이 인기에 영합하는 법률안은 입법예고,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오로지 법률안의 성안을 위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심각한 반발이 초래되고, 입법예고나 공청회를 거치더라도 이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도 한다. 결국 선심성 입법으로 인하여 전체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입법이 우리 사회에

46) 김경동, 앞의 논문, 101-102쪽

47) Mahews, D. R., “Congressional Elections: the case of the vanishing marginals”, Polity, 6, 1974, pp.295-317

48) 정극원, 앞의 논문, 289쪽

더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국가경제적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⁴⁹⁾

이러한 시각은 앞에서 본 의원발의 법률안의 양적 증가의 원인과 맥을 같이 한다. 재선을 목표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법률안이나 다른 법률안과 유사한 법률안을 다수 발의하고,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 통과될 만큼 완성도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결과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부제출 법률안에 비해 낮은 가결률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초선·재선의원이 다음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해 입법활동에 적극적이거나, 임기 동안의 입법 활동이 선거 결과에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원내에서의 의정활동이 유권자에 의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⁵⁰⁾

V. 낮은 가결률에 대한 다른 시각

반면, 의원발의 법률안의 낮은 가결률을 가결과 부결이라는 결과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연구 결과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발의된 법률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임기만료폐기, 철회, 가결 등 다양한 입법 결과로 귀결되는데, 정부제출 법률안이나 대안이 의원발의 법률안에 비해서 본회의 가결이 용이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원안가결과 수정 후 가결을 구분하여 보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원안 가결보다는 수정 후 가결에 더 큰 영향을

49) 김경동, 앞의 논문, 103-104쪽

50) 윤종빈, 김윤실, 정희수, “현직의원의 득표율 증감 분석: 제19대 총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6권 2호, 2015, 39-40쪽

미치고, 상임위원회의 대안은 수정 후 가결보다 원안 가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가결되더라도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정을 거치는 경향이 높고, 상임위원회의 대안은 본 회의를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폐기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정부 제출 법안은 내용만 반영된다면 국회에서 내놓은 다른 대안에 밀려 폐기되는 경향이 높았는데, 다만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이후 발의된 다른 의안에 반영되는 경향이 높았다. 상임위원회 대안은 입법폐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이러한 현상은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견제가 발현된 결과이고, 국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영향력이 검증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⁵¹⁾

이와 같은 연구는 낮은 가결률이 곧 입법의 질적 저하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법률안이 실제로 처리되는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대안을 분석 대상으로 하면서도 이를 단순히 국회의 행정부 견제로만 해석하고, 그 대안을 구성하는 법률안 간의 관계를 통해 질적인 차이를 연구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VI.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기간에 대한 연구

정부제출 법률안에 비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속도를 통해 양자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표2>에서 보는 것처럼, 제14대 국회에서부터 제17대 국회까지 법률안의 발의자에 따라 국회통과 기간을 비교해 보면, 모든 회기에 있어 정부제출 법률안이 의원발의 법

51) 이현출·김준석, 앞의 논문, 141-142쪽 및 김준석, “입법시간과 입법결과의 경쟁위험 분석(Competing Risks Analysis): 18대 국회 접수의안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1권3호, 2012, 91쪽

률안보다 통과 속도가 빠른 것을 볼 수 있다.

<표2>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발의 법률안의 국회통과 기간⁵²⁾

시기 구분	법률안 종류	법률안 수	평균 기간(일)
제14대 국회	의원발의	40	113.32
	정부제출	136	61.20
제15대 국회	의원발의	63	133.98
	정부제출	181	74.62
제16대 국회	의원발의	103	222.99
	정부제출	110	111.33
제17대 국회	의원발의	128	283.71
	정부제출	112	180.45
평균	의원발의	334	216.34
	정부제출	539	101.13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국회통과 기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216.34일,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101.13일로 115.27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정부제출 법률안의 처리기간이 약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이 혼합되는 경우에는 평균 처리 일수가 294.03일로 나타나면서, 의원발의 법률안보다도 그 국회통과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⁵³⁾

법률안의 통과 기간이 길수록 법률안의 완성도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연구에서 드러난 처리 기간을 통해 간접적

52) 목진휴 외, “우리나라 국회의 법률안 처리속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37, 2007, 81-82쪽의 표 수정

53) 목진휴 외, 앞의 논문, 82-83쪽. 다만, 이 연구에서는 제14대부터 제17대까지 정부/혼합/의원입법의 통과기간의 평균만을 제시하였고, 회기 별로 별도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으로 법률안의 질을 추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론은 불완전한데,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법률안의 완성도 때문인지, 혹은 법률안의 난이도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적 대립과 같은 법률안 외적인 문제 때문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 제출 법률안이 혼합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지면서 필연적으로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처리 기간을 바탕으로 질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제4절 의원발의 법률안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위와 같은 의원발의 법률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크게 나누어 본다면 국회 내부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과 정부와의 관계에서의 개선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I. 국회 내부에서 개선 방안을 찾는 시각

먼저,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참여 확대를 들 수 있다. 「국회법」 제43조에서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⁵⁴⁾, 같은 법 제64조에서는 이해관계자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제도를 두면서, 특히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바,⁵⁵⁾ 이러한 규정을 적

54) 제43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55) 제64조(공청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극적으로 활용하여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입법에 대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고 의원들 간에 입법에 관한 의견이 자유롭게 발표되고 교환될 수 있으며, 타협과 설득을 통하여 입법과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이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⁵⁶⁾

또한,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과정의 도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입법예고제도의 강화와 실효성 제고, 입법청문회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참여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에 따른 입법의 경우에는 입법조정기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 때 입법조정기구는 개별 법률안을 검토하여 자문하고, 입법정책의 방향설정이나 입법갈등의 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⁵⁷⁾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률안 자체의 완성도와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법안비용추계제도와 입법평가제도라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추계하여 재정적 측면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안비용추계제도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그 객관성과 신뢰성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입법의 소요비용을 추정함으로써 법률이 재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거시적으로 총수입, 총지출, 재정적자, 국가채무 등 국가개정지표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평가하는 재정영향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⁵⁸⁾

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 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⑥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56) 김경동, 앞의 논문, 112-113쪽

57) 김경동, 앞의 논문, 117쪽

법률안의 영향을 사전·사후에 분석하여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인한 정책적 결과를 검토하고 예상할 수 있는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은 의원발의 법률안이 실적 올리기 식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아 졸속입법이나 부실입법을 억제하고, 법률안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입법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입법평가기관을 정부 또는 국회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또는 독립기관화 할 것인가의 문제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도화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⁵⁹⁾

의원발의 법률안을 지원하는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역할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증가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지원하는 국회 법제실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국회도서관의 박사급 전문 인력을 입법 조사에 활용하는 등 인력의 재배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거나 업무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법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문 인력들이 한 곳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여 전문성을 습득시키고 향상시키는 한편, 입법지원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국회 내 조직 간의 협조와 칸막이 해소와 같은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한다.⁶⁰⁾

위와 같이 다양한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적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의원발의 입법 과정의 개선방안으로 귀결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유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정부제출 입법 과정과 유사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의

58) 홍완식, 앞의 논문, 112-113쪽

59) 홍완식, 앞의 논문, 114-115쪽

60) 정극원, “의원입법의 증가에 따른 국회입법조직의 효율화 방안”, 공법학 연구 제16권, 2015, 122-128쪽

원발의 법률안 질적 저하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원인을 찾기 보다는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 설명하다 보니, 그 해결책 역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개선 방안을 찾는 시각

다음으로, 정부와의 관계에서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제도적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의 내용을 입법예고나 행정부처 통지제도를 통하여 정부가 파악하고, 그에 대한 검토를 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혼란과 충돌을 예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⁶¹⁾ 이를 위해서는 법제처가 행정 각 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하여 행정부 내의 의견을 통일시켜 국회에 행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⁶²⁾

그 밖에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를 통하여 입법 협력을 강화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지속적인 인적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정부가 방대한 집행기구를 활용하여 획득하는 입법정보와 국회가 입법조사처를 통해 수집하는 입법정보 등의 방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⁶³⁾

상대적으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61) 전학선, 앞의 논문, 85쪽

62) 전학선, 앞의 논문, 91-92쪽

63) 정준호, “의원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5, 106-107쪽 및 조정찬, “입법환경의 변화와 입법절차 상의 개선방안”, 법제 통권 제626호, 2010, 55·58쪽

제5절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

I. 기존 연구의 한계

의원발의 법률안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의원발의 법률안이 질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가결률은 정부제출 법률안에 비해 낮은 상황이 나타난다는 점은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서 공유하고 있다. 재선을 추구하는 국회의원의 성향으로 인해 질적으로 낮은 유사한 법률안이 중복 발의되고, 정부제출 법률안에 비해서 간이하면서 조정 절차가 부족한 입법 절차는 그와 같이 수준 낮은 법률안을 걸러내지 못하고 모두 국회 안으로 투입시켜 버리며, 여기에다가 국회 내부 심의 절차의 한계가 더해진 결과,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적 저하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안으로 국회 내부의 변화를 통해 법률안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의원발의 법률안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연구는 법률안 입안 절차, 국회의 행태, 국회의원의 재선 추구 등 법률이 성립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그 과정상의 이유로 인해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하고 있을 뿐, 법률안 자체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즉, 실제로 법률안의 내용을 분석하지는 않은 채, 법률안을 만드는 여러 외적인 상황을 근거로 해서 법률안의 질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법률안의 질이 낮은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법률안의 질이 낮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다. 원안가결과 수정가결과 같은 법률안 처리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법률안의

처리 기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률안의 질을 짐작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이러한 연구만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적 저하를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다.

즉, 기존의 연구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이 낮다는 통계에서 출발하고, 가결률이 낮은 것은 의원발의 법률안이 질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법률안의 질에 대한 검증은 없이 질적 저하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II. 가결률 통계가 가지는 함정

그렇다면 법률안의 질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우선 의원발의 법률안의 낮은 가결률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부터 시작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많이 발의를 하고, 통과는 적게 되니 가결률이 낮아지는 것인데, 이 ‘많이 발의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법률은 많이 만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에 있는 법을 많이 고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회가 의결을 할 때마다 수십 건의 법률이 새로 생기지는 않고 있으므로, 의원입법 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후자의 요인이 크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제18대 국회 기간 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66건의 의원발의가 있었고, 「식품위생법」은 98건, 「도로교통법」은 127건, 「조세특례제한법」은 무려 344건의 의원발의 입법이 있었다.

이러한 중복발의는 가결건수/제출건수로 계산하는 단순 가결률을 매우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 대한 127건의 의원입법 중 56건의 법률안은 5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되어 국회를 통

과했는데, 이들 56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은 모두 대안반영폐기가 된 것으로 처리된다. 결국 국회의원이 발의한 127건과 위원회가 발의한 5개가 합쳐져 의원발의 법률안 132건이 되고, 가결된 수는 5건이 되어버리니, 그 가결률은 낮을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는 56건이 5건으로 모아져서 법률에 반영되었으므로 56건의 의원발의는 통과된 것이나 다름이 없음에도⁶⁴⁾, 127건 모두가 가결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원입법의 가결률은 법률의 통과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낮은 가결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기존 논의는 법률안의 처리 과정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채 의원입법의 외견만을 보고 그 질적 저하를 단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예컨대, <표1>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13대 국회 이후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은, 가결률을 법률반영률⁶⁵⁾로 대체하는 경우, 다음 <표3>과 같이 수정된다.

<표3> 제13대 국회 이후 제18대 국회까지의 법률안 처리 현황(수정)⁶⁶⁾

시기 구분 (연도)	전체 법률안	의원발의 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		
		제출 건수	반영 건수	법률 반영률	제출 건수	반영 건수	법률 반영률
제13대(88~92)	938	570	345	60.5%	368	355	96.5%
제14대(92~96)	902	321	167	52.0%	581	561	96.6%
제15대(96~00)	1,951	1,144	687	60.1%	807	737	91.3%

64) 국회에서도 이러한 법률안은 ‘대안반영’된 법률안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분류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통계 참조

65) 법률반영률 = (가결 수 + 대안반영 수)/제출 수

6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참조하여 수정

제16대(00~04)	2,507	1,912	1,027	53.7%	595	551	92.6%
제17대(04~08)	7,389	6,387	2,894	45.3%	1,102	881	79.9%
제18대(08~12)	13,913	12,220	4,890	40.0%	1,693	1,288	76.1%

<표4> 제13대 국회 이후 제18대 국회까지의 법률안 처리 현황

시기 구분 (연도)	전체 법률안	의원발의 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		
		제출 건수	가결 건수	가결률	제출 건수	가결 건수	가결률
제13대(88~92)	938	570	164	29%	368	321	87%
제14대(92~96)	902	321	119	37%	581	537	92%
제15대(96~00)	1,951	1,144	461	40%	807	659	82%
제16대(00~04)	2,507	1,912	516	27%	595	431	72%
제17대(04~08)	7,389	6,387	1,350	21%	1,102	563	51%
제18대(08~12)	13,913	12,220	1,663	13.6%	1,693	690	40.8%

<표3>과 <표4>를 비교해 보면, 법률반영률과 가결률 모두 정부제출 법률안이 의원발의 법률안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많게는 정부제출 법률안이 세 배까지(제13대, 제18대) 높게 나타나는 가결률에 비해 법률반영률은 최대 1.9배 정도(제18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대안을 통해 법률로 성립되는 과정을 고려할 때, 낮은 가결률만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의 설득력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Ⅲ. 중복발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낮은 가결률을 근거로 의원발의 입법의 질적 저하를 논하는 기존 연구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자체의 내용과 그 심의 과정을 통한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질적인 비교가 필요하고, 본 연구에서는 중복발의 법률안을 통해 양자에 대한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국회의원의 재선추구 성향이 중복발의로 이어지고, 중복발의로 인해 법률안의 질이 떨어진다는 기존의 논의에서 중복발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와 같다고 할 수 있음에도, 기존의 연구는 국회의원들이 같은 법률안을 여러 개 중복발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몇몇 예시만을 인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⁶⁷⁾

우선, 의원발의 법률안 자체의 객관적인 품질을 평가하는 작업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할 때, 중복발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률안의 상대적 질을 추론해 낼 수 있다. 법률안은 그 자체의 구성과 체계의 정합성, 다른 법률과의 관계, 헌법과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법률안의 성립부터 의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 자체가 지나치게 방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도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상대적 질을 비교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의 법률에 대해서 국회의원과 정부가 모두 발의하는 중복발의 법률안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그 상대적 질의 차이를 논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재선추구 성향과 중복발의와의 관계는 정책의 유형에 따른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국회의원의 발의하는 법률은 정책의 유형에 따라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기도 하고, 그 반대일 수도 있으며,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쉬운 정책유형

67) 고문현, 앞의 논문, 2014, 138쪽 등

과 그렇지 않은 정책유형 간의 중복발의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재선추구가 중복발의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적 저하의 원인인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연구 대상과 방법

제1절 중복발의 일반현황 연구

I. 연구대상

의원발의 법률안의 중복 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 중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하는 대안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법률안의 중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법률안 내용을 조사해야 하는데, 국회에 접수된 모든 법률안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제18대 국회(2008년 ~ 2012년)에 접수된 13,913건의 법률안 가운데 1,029건의 대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대안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안은 유사한 법률안을 통폐합하여 만들어지므로, 중복되는 발의가 있는 경우 하나의 대안에 모이게 되어 그 내용을 서로 비교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의원발의 법률안뿐만 아니라 정부 제출 법률안도 같이 통합하므로,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내용상 유사점을 비교하기에도 유리하다. 더욱이, 대안으로 통합된다는 것은 그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률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므로, 법률안 발의 건수와 법률안 통과 건수로 평가되는 국회의원 입법 활동 평가⁶⁸⁾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국회의원들이 발

68) 국회사무처에서는 의안발의 건수와 가결건수 및 회의 출석률을 고려하여 매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국회 보도자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2013. 12. 29. 참조

의한 통과 가능성 있는 법률안이 얼마나 중복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즉,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상대적인 질적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정의 방식이나 국회 회기와 법률안 중복 발의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류 방법은 제18대 국회에 접수된 1,029건의 대안을 그 구성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끼리 통합되어 만들어지는 의원 대안,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이 통합되어 만들어지는 의원 및 정부 대안, 정부제출 법률안끼리만 통합되어 만들어지는 정부 대안으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각각의 대안을 구성하는 법률안들의 내용에 따라 대안이 유사·중복되어 있는지, 별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유사·중복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지를 구분한다. 이 때 유사·중복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① 두 개 이상의 법률안이 같은 조문을 개정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개정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면, 유사·중복 법안으로 본다.

② 두 개 이상의 법률안이 같은 조문을 개정 대상으로 하면서 그 개정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면(예를 들어, 하나의 법률안에서는 벌금 액수를 높이고 다른 법률안에서는 벌금 액수를 낮추는 경우), 유사·중복 법안으로 보지 않는다.

③ 두 개 이상의 법률안이 서로 다른 조문을 개정 대상으로 하면서도 개정 내용이 같다면 유사·중복 법안으로 본다.

④ 두 개 이상의 법률안의 개정 내용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 목표가 유사한 경우에는(예를 들어, 한시적 조직인 A에 대해서, 하나의 법률안에서는 A를 영구적 조직으로 바꾸고, 다른 법률안에서는 A가 가지는 기능을 B로 이관하여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유사·중복 법안으로 본다.

⑤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의 경우에는 법률안 전체를 비교하여 장·절·조문의 구성 순서나 규정 방식이 다르더라도 정책 집행의 방법이 유사하다면 유사·중복 법안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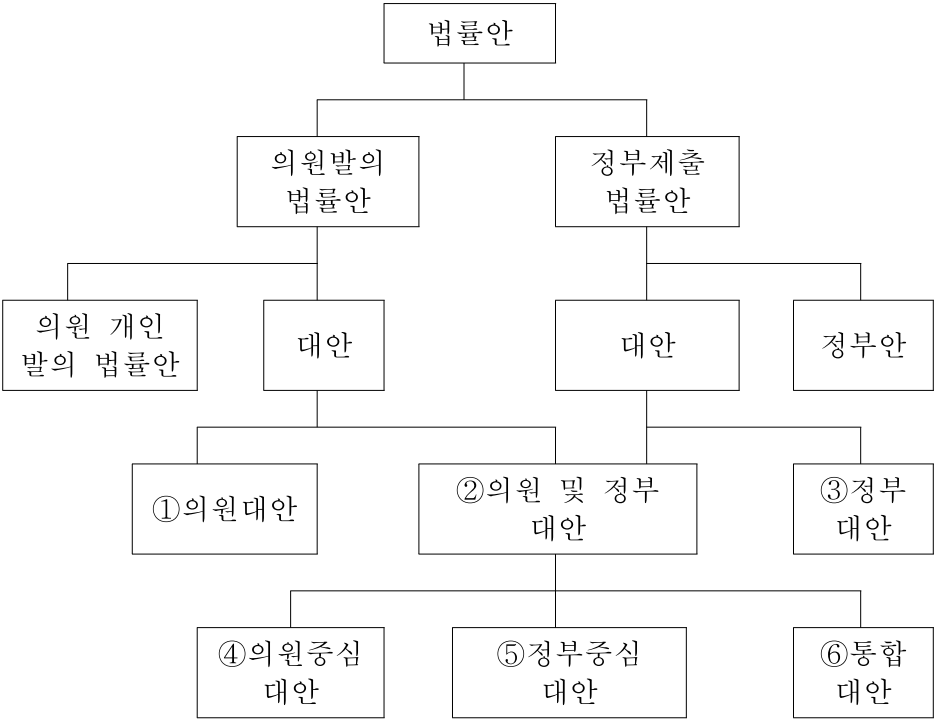
⑥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 중 두 개 이상의 법률이 기본적인 정책 집행 방법은 유사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이나 조직 등 각각의 법률안을 구분 수 있는 특징을 보인다면(예를 들어, 하나의 법률안에서는 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것을 다른 법률안에서는 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경우), 유사·중복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된 것으로 본다.

또한, 의원 및 정부 대안의 경우에는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통합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대안의 내용과 대안으로 흡수되면서 폐기된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정부제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유지되면서 의원제출 법률안이 그 일부로 흡수되는 경우(정부중심 대안), 의원발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유지되면서 일부의 정부제출 법률안이 흡수되는 경우(의원중심 대안), 어느 쪽이 다른 쪽을 포섭할 수 없는 경우(통합 대안)로 구분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법률안을 다음 <표5>와 같이 구분하고, 이중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은 ①의원 대안, ②의원 및 정부 대안, ③정부

대안, ④의원중심 대안, ⑤정부중심 대안, ⑥통합 대안이 된다.

<표5> 법률안의 구분



위와 같은 구분 하에서 각 유형 별로 중복발의 여부를 파악할하는데, 실제 법률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안 중 중복발의가 어느 정도인지, 의원발의 법률안의 중복 정도는 어떠한지, 정부제출 법률안과 의원발의 법률안이 중복되는 경우 어느 쪽이 우세한지 등을 우선 분석할 것이다. 또한, 중복발의가 어떤 경우 많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법률안의 종류(일부개정, 전부개정, 제정)에 따라 중복 발의가 발생하는 빈도를 알아보도록 하고, 국회의 회기 진행상황이나 상임위원회에 따라 중복발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분석하려 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중복발의가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원발의 법률안이 어느 정도나 정부제출 법률안에 흡수되고 있는지, 법률안의 성질에 따라 중복발의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의 품질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가설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원발의 입법의 질에 문제가 있고, 재선을 위한 보여주기식의 입법 행태나 법률안 발의 건수를 채우기 위한 베끼기 입법이 만연하다면, 중복발의 현황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1. ①의원 대안보다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비중이 높고, ③정부 대안은 비중이 매우 낮을 것이다.

정부발의 입법이 질적으로 우월하다면, 국회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의원발의 법률안만으로 대안이 되는 현상보다 정부발의 법률안과 통합되어 대안을 구성하게 될 것이므로,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발의에 제한이 없는 의원발의 법률안과는 달리 정부입법은 입법계획에 따라 작성되고, 입법예고에서부터 법제처 심사까지의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담당 부처의 의사가 종합되어 발의되기 때문에 정부입법끼리만 대안을 구성할 만큼 많은 법률이 발의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③정부 대안의 수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2. 법률안이 중복되는 경우, ①의원 대안은 ②의원 및 정부 대안에 비해 법률안 전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은 법률안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법률을 발의하면서 다른 법률안을 참고하여 중복발의를 하게 된다면, 정부가 입안 중인 법률안보다는 상대적으로 정보를 얻기 쉬운 의원발의 법률안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①의원 대안을 구성하는 법률안들은 ②의원 및 정부 대안에 비해 각각의 법률안 전체가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법률 발의 절차가 간이한 의원발의 법률안은 필요한 개정 사항을 수시로 발의할 수 있는 반면, 법률 발의 절차가 복잡한 정부발의 법률안은 필요한 개정 사항을 종합하여 발의하기 때문에 하나의 법률안에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을 구성하는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발의 법률안 전체가 중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정부발의 법률안과 중복되는 의원발의 법률안과 그렇지 않은 의원발의 법률안이 혼합될 가능성이 높다.

가설3. ④의원중심 대안, ⑤정부중심 대안, ⑥통합 대안은 ⑤정부중심 대안 > ⑥통합 대안 > ④의원중심 대안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정부발의 법률안이 질적으로 우수하다면, 대안을 구성할 때 정부발의 법률안이 중심이 될 것이고, 의원발의 법률안이 중심이 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4.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은 중복발의 비율이 높고,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비중이 크며, ⑤정부중심 대안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제정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든다는 점에서, 전부개정안은 기존 법률의 모든 조문을 개정한다는 점에서 일부개정안보다는 난이도가 높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다른 법률안을 참고하여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행정의 전문화와 행정부 공무원이 가지는 전문성으로 인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행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⁶⁹⁾을 고려하면,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이 정부의 정책의지 없이 의원발의만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고,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이 통합될 때에도 ⑤정부중심 대안으로 구성되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5. 일부개정안은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에 비해서 중복발의 비율은 낮고, ①의원 대안의 비중이 크며, ⑤정부중심 대안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일부개정안은 개정 범위가 좁고, 중복발의가 될 가능성도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의원발의 법률안을 국회의원들이 서로 참고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의원발의 법률안끼리 유사한 내용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①의원 대안의 형태가 많아 나타날 것이고, 의원발의 입법과 정부발의 입법이

69) 표시열, “행정부의 정책결정 주도에 대한 사법적 견제방안과 그 한계: 한·미 위헌법률심판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05권 0호, 2005, 175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의원발의 입법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⑤정부 중심 대안으로 구성될 것이다.

가설6. 국회가 진행될수록 중복발의 비율과 ①의원대안의 비율은 낮아질 것이다.

국회의원의 입법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적 저하가 나타난다면, 국회의 회기가 진행될수록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경험과 학습을 통해 입법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 초반보다는 후반에 중복발의 비율은 낮아질 것이고, 국회의원들 간 법률안을 배끼는 사례도 줄어들 것이므로 ①의원대안의 비율도 낮아질 것이다.

가설7.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발의 법률안이 중복되는 경우, 국회 초반에는 ⑤정부중심 대안이 주를 이룰 것이나, 후반으로 가면 ④의원 중심 대안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국회의원의 입법 역량 강화에 따라 ④의원중심 대안의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8. 상임위원회별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의 중복발의 경향성이 나타날 것이다.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처나 법률의 성격에 따라 법률 발의의 필요성이 서로 다르다.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 집행해야 하는 정책이 있는가 하면, 법률보다는 정치적 결정이나 통치행위가 중심이 되는 정책도

있을 수 있다. 정책집행에 있어 법률의 중요성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의 완성도에 대한 관심, 지식, 경험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법률을 주로 다루는 상임위원회(예: 법제사법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의원발의의 질이 높을 것이고, 이에 따라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비율과 ⑤정부 중심 대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며, 법률의 중요성이 낮은 상임위원회(예: 국방위원회)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제2절 정책유형에 따른 중복발의 현황 연구

I. 연구방법

일반적인 중복발의 분석에서 나아가, 국회의원의 재선 추구 행태와 관련한 법률안의 중복발의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려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재선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 할 것이고, 실제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법률안 발의 건수와 법률안 통과 건수를 통해 의정활동이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한 유인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재선의 추구는 여전히 중복발의의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 중복발의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에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러한 행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또는 법률 개정 행위와 유권자들의 지지가 별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복지정책이나 문화·예술 정책과 같이 지원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 법률에 적극적으로 지원 근거를 두려고 할 것이다. 「노인복지법」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을 우선 배려하도록 정하고 있고⁷⁰⁾, 경로당의 정부관리양곡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⁷¹⁾ 등 법률에서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국민의 권리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책은 법률에서 정책 대상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상 집단의 반대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섞는 행위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⁷²⁾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가 가

70)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71)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72)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시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하는 행위

능⁷³⁾할 뿐만 아니라 벌칙⁷⁴⁾이나 과태료⁷⁵⁾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정책 대상인 사업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법률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을 지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이와 같이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 법률안의 발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중복발의의 유인도 정책의 성격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을 정책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된 법률의 대안을 분석함으로써 중복발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II. 정책유형의 분류

정책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많

-
-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73)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6.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74)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75) 제9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은 영향을 끼친 연구는 Theodore J. Lowi의 정책유형론이다. Lowi는 정책의 강제 가능성(likelihood of coercion)과 강제 적용대상(applicability of coercion)에 따라 정책을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으로 분류하였다⁷⁶⁾.

분배정책은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서비스를 배분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이다. 분배정책은 여러 가지 사업들로 구성되고 상호 커다란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이러한 세부사업들의 집합이 하나의 커다란 정책을 형성한다. 그 결정과정은 돼지구유(pork-barrel) 식의 갈라먹기 다툼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승자와 패자가 정면대결을 벌일 필요가 없다.⁷⁷⁾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대해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억제하여 반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정책이다. 불응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고, 법률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혜택을 보는 자와 피해자를 정책 결정시에 선택하게 된다.⁷⁸⁾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계급대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재산 자체와 평등한 소유를 문제로 삼고 있는 등의 특징을 지닌다.⁷⁹⁾

구성정책은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기구나 조직의 설립, 공직자 보호와 군인 퇴직 연금에 관한 정책과 같이 정치체제에서의 투입을 조직화하고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⁸⁰⁾

76) T. J. Lowi, "American Business, Public Policy, Case-Studies and Political Theory", World Politics Vol.16, 1964, 고기동·이은국·이은미,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입법화 과정 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4권 4호, 2015, 279쪽에서 재인용

77) T. J. Lowi, 앞의 논문,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1, 69-70쪽에서 재인용

78) T. J. Lowi, 앞의 논문, 정정길, 앞의 책, 70-71쪽에서 재인용

79) T. J. Lowi, 앞의 논문, 정정길, 앞의 책, 72쪽에서 재인용

Lowi의 정책유형 분류는 재분배정책과 규제 및 배분정책과의 중복이 많고, 정부의 모든 정책을 포괄하기가 어려우며,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자들이 가지는 정책에 대한 지배적 기대를 분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편, 조작화가 어려워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약점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⁸¹⁾ 반면, 개념적으로 용이한 시각을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주고, 다른 정책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며, 정책유형에 따른 정치적 관계의 특성을 간명하게 부각시켜준다는 장점이 있다.⁸²⁾ 본 연구에서는 Lowi의 정책유형을 기본으로 하여 제18대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 중 각 정책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고, 그 중복발의 양상을 파악하기로 한다.

III. 법률안 분류

고기동 등(2015)은 제18대 국회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법률안 중 Lowi의 분류기준에 따라 262개를 선정한 후, 행정학적 지식과 법무 경험이 있는 3명의 패널 간 합의를 통하여 최종 212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⁸³⁾

1. 분배정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80) T. J. Lowi, "Fou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PAR vol.32, 1972, 정정길, 앞의 책, 72-73쪽에서 재인용

81) 정정길, 앞의 책, 74-75쪽

82) 고기동 외, 앞의 논문, 279-280쪽

83) 고기동 외, 앞의 논문, 285쪽, 287쪽, 289-291쪽

「도서개발 촉진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액화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유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규제정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법」, 「이자제한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관리법」, 「지하수법」

3. 재분배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긴급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기초노령연금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의 분류를 따르되, 조세감면의 경우 재분배정책의 성격도 가질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부의 이전보다는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에 가깝다는 점에서 승자와 패자가 정면대결을 벌일 필요가 없는 분배정책의 성격이 더 크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분배정책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위 사례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을 선정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대안으로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은 제외하였다. 이에 더하여, 정부의 조직, 공직자 보수, 군인 퇴직 등과 관련

된 구성정책에 해당하는 법률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IV. 연구가설

국회의원들이 재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중복발의를 하게 된다면, 정책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9. 대안으로 통합되는 법률안의 수는 분배정책 > 규제정책 > 재분배정책 > 구성정책의 순으로 많을 것이다.

법률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분배정책의 경우 가장 활발하게 법률 개정이 시도될 것이고, 규제정책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역시 많은 수의 법률안이 발의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이 관심을 적게 가지는 구성정책은 중복발의의 유인이 가장 낮을 것이다.

가설10. 중복발의 비율은 분배정책 > 재분배정책 > 규제정책 > 구성정책의 순으로 높을 것이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수혜를 주는 정책은 중복되는 내용이라도 적극적으로 발의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유사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의 재선 추구 성향을 고려하면, 분배정책의 중복발의 비율이 가장 높을 것이고, 규제정

책은 낮을 것이다. 다만, 규제정책을 통해 수혜를 얻는 집단도 분명 존재하므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은 구성정책보다는 중복발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재분배정책은 수혜와 비용이 섞여 있으므로 분배정책과 규제정책의 중간에 위치할 것이다.

가설11. 대안의 분류에 있어, ①의원 대안 비율은 분배정책 > 재분배정책 > 규제정책 > 구성정책 순으로 높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관심을 얻기 쉬운 분배정책을 다수 발의할 것이므로, ①의원 대안 비율은 분배정책이 가장 높을 것이고, 부의 이전을 초래하여 정책의 섬세한 조정이 필요한 재분배정책은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비율이 분배정책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규제정책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가 불리한 측면에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이 더 크게 요구되어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구성정책은 정부의 구성에 관한 것이므로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이 주를 이룰 것이다.

가설12. 정책유형에 따른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통합 형태는 분배정책의 경우 ④의원중심 대안의 비율이 높고, 규제정책은 ⑤정부중심 대안, 재분배정책은 ⑥통합 대안, 구성정책은 ⑤정부중심 대안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 11.과 같이, 의원발의가 적극적인 분배정책은 ④의원중심 대안이 높게 나타날 것이고, 그 반대인 규제정책은 ⑤정부중심 대안이, 정책 조정이 필요한 재분배정책은 ⑥통합 대안이, 정부의 구성이 주 목적인 구성정책은 ⑤정부중심 대안이 비중이 높을 것이다.

제4장 연구 결과

제1절 제18대 국회 대안의 중복발의 현황

제18대 국회에서는 위원장 명의로 1,029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위원회안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이거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은 950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중복발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각 대안에 몇 개의 법률이 통합되었고(통합 개수), 각 대안은 ①의원 대안, ②의원 및 정부 대안, ③정부대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분류하였으며(대안 분류),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경우에는 ④의원중심 대안, ⑤정부중심 대안, ⑥통합 대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재분류하였다(대안 재분류). 각 대안을 구성하는 법률안 간의 내용을 비교하여 유사·중복 법안(전체중복), 유사·중복이 없는 법안(중복없음), 유사·중복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된 법안(일부중복)으로 중복 여부를 구분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⁸⁴⁾

I. 중복발의 비율

18대 국회에서 의결된 대안 중 1건의 법률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대안으로 의결된 13건의 법률안은 본 연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937건의 대안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그 결과, 중복발의(전체중복 법률안과 일부중복 법률안의 합을 말하며, 이하 같다)

8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입법자료, 분석 결과 전체는 부록 1. 참조

비율은 전체중복 법률안은 109건(11.6%), 일부중복 법률안은 422건(45.0%)으로, 총 531건(56.7%)의 대안이 중복발의 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안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법률안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복발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발의 주체에 따른 대안의 발의 개수를 살펴보면, ①의원 대안은 416건으로 전체 대안의 44.4%이고,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은 502개, 53.6%로 나타났다. ③정부 대안은 19개로, 2.0%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①의원 대안과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개수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가설 1.(①의원 대안보다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비중이 높고, ③정부 대안은 비중이 매우 낮을 것이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설 2.(법률안이 중복되는 경우, ①의원 대안은 ②의원 및 정부 대안에 비해 법률안 전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은 법률안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와 관련하여, 각 대안의 발의 주체별 중복발의 현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발의 주체별 중복발의 현황

	①의원 대안	②의원 및 정부 대안	③정부 대안	계
전체중복	78건(18.8%)	31건(6.2%)	0건(0%)	109건(11.6%)
일부중복	149건(35.8%)	273건(54.4%)	0건(0%)	422건(45.0%)
소계	227건(54.6%)	304건(60.5%)	0건(0%)	531건(56.6%)
중복없음	189건(45.4%)	198건(39.4%)	19건(100%)	406건(43.3%)
계	416건(44.4%)	502건(53.6%)	19건(2%)	937건(100%)

대안의 중복발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③정부 대안의 경우에는 중복발의 법안이 0건인데, 이는 법률안을 담당하는 하나의 부처가 같은 법률에

대해 중복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중복발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③정부 대안 외에 ①의원 대안의 중복 비율이 54.6%,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중복 비율은 60.5.%로,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이 조금 더 높은 중복발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중복 법률안의 경우에는 ①의원 대안이 ②의원 및 정부 대안에 비해 약 3배 많게 나타나고, 일부중복 법률안의 경우에는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이 ①의원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가설 2.(법률안이 중복되는 경우, ①의원 대안은 ②의원 및 정부 대안에 비해 법률안 전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은 법률안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을 재분류한 ④의원중심 대안, ⑤정부중심 대안, ⑥통합 대안의 중복발의 성질을 살펴보면, ②의원 및 정부 대안 502건 중 ④의원중심 대안, ⑤정부중심 대안, ⑥통합 대안은 각각 14건(2.8%), 116건(23.1%), 372건(74.1%)으로, ⑥통합 대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발의 법률안 중 어느 쪽이 중심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복없음 법률안이 모두 ⑥통합 대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복없음 법률안으로 구성된 대안은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발의 법률안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이들 법률안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쪽 법률안이 더 많이 대안으로 포섭되었는가는 분명히 드러난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쪽 법률안이 질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것인지, 혹은 법률안으로 공포되었을 때 어느 법률안이 추구하는 정책이 더 국민들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개별 법률 별로 별도의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판단을 내리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결국, 단순히 양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 혹은 의원 중

심의 대안이 되었다고 분류하는 것은 정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우려가 있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복없음 법률안은 모두 ⑥통합 대안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②의원 및 정부 대안 중 ⑥통합 대안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 비율은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②의원 및 정부 대안 중에서 중복발의된 대안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야 할 것인데, 중복발의된 대안의 경우, 각 법률안과 대안의 내용을 파악하면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발의 법률안 중 한 쪽으로 포섭이 가능한지, 혹은 양자의 내용과 비중이 동등하여 한 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다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7>와 같다.

<표7> 중복발의 법률안의 대안 구성 현황

	④의원중심 대안	⑤정부중심 대안	⑥통합 대안	계
②의원 및 정부 대안 전체	14건(2.8%)	116건(23.1%)	372건(74.1%)	502건(100%)
중복발의 법률안	14건(4.6%)	116건(38.2%)	174건(57.2%)	304건(100%)

여전히 ⑥통합 대안의 수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중복발의된 대안 중 ⑤정부중심 대안의 비율을 보면,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발의 법률안에서 중복이 있을 때에는 의원발의 법률안보다는 정부발의 법률안으로 포섭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정부중심 대안의 수 보다 ⑥통합 대안의 수가 많다는 점에서 가설3.(⑤정부중심 대안 > ⑥통합 대안 > ④의원중심 대안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과는 다른 결과이나, ④의원중심 대안이 ⑤정부중심 대안의 12%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는 가설3.(⑤정부중심 대안 > ⑥통합 대안 > ④의원중심 대안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과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II. 법률안 개정 형태에 따른 중복발의 비율

법률안의 개정 방식에는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 기존 법률의 모든 조문을 개정하는 전부개정, 기존 법률의 일부 조문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이 있다. 제18대 국회의 대안 중 제정안은 56건, 전부개정안은 51건, 일부개정안은 830건이다.

제정안의 중복발의 현황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법률 제정안의 중복발의 현황

	①의원 대안	②의원 및 정부 대안	③정부 대안	계
전체중복	23건(63.9%)	4건(20.0%)	0건	27건(48.2%)
일부중복	13건(36.1%)	15건(75.0%)	0건	28건(50.0%)
중복없음	0건	1건(5.0%)	0건	1건(1.8%)
계	36건(64.3%)	20건(35.7%)	0건	56건(100%)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1건의 예외 외에는 모두 중복발의가 있었고(중복발의 비율 98.2%), 이 부분은 가설4.(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은 중복발의 비율이 높고,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비중이 크며, ⑤정부중심 대안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와 일치한다. 그러나 ①의원 대안의 비율이 64.3%에 달하고 있고, 이 중 중복발의된 19건을 보면, ④의원중심 대안은 2건(10.5%), ⑤정부중심 대안은 5건

(26.3%), ⑥통합 대안이 12건(63.2%)으로, 정부발의 법률안으로 포섭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가설4.(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은 중복발의 비율이 높고,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비중이 크며, ⑤정부중심 대안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와는 반대되는 결과인데,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 만한 정책을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제정안의 형태로 중복발의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진 후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대되면서 발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의 심각성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추진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등이 그러한 사례로, 국회의원들이 기존 법률을 정치하게 다듬기보다는 새로 법률을 만드는 것을 선호한 결과일 것이다. 결국,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을 입안할 때 국회의원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 반면, 법률안의 정교한 개정작업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전부개정안의 중복발의 현황은 다음 <표9>과 같다.

<표9> 법률 전부개정안의 중복발의 현황

	①의원 대안	②의원 및 정부 대안	③정부 대안	계
전체중복	0건(0%)	3건(7.3%)	0건	3건(5.9%)
일부중복	8건(80%)	35건(85.4%)	0건	43건(84.3%)
중복없음	2건(20%)	3건(7.3%)	0건	5건(9.8%)
계	10건(19.6%)	41건(80.4%)	0건	51건(100.0%)

전부개정안의 경우, 제정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복발의 비율은 90.2%로 높고,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비중은 80.4%이며, ②의원 및 정부 대안 중 중복발의에 해당하는 ④의원중심 대안은 3건(7.9%), ⑤

정부중심 대안은 16건(42.1%), ⑥통합 대안은 19건(50%)으로 파악되어, 제정안과는 반대로 ⑤정부중심 대안 위주의 입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전부개정안에 있어서는 가설4.(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은 중복발의 비율이 높고,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비중이 크며, ⑤정부중심 대안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가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제정안의 경우와 반대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이 기존 법률 전체를 검토해야 하는 난이도 높은 전부개정 작업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다.

대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부개정안의 중복발의 비율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10> 법률 일부개정안의 중복발의 현황

	①의원 대안	②의원 및 정부 대안	③정부 대안	계
전체중복	55건(14.9%)	24건(5.4%)	0건	79건(9.5%)
일부중복	128건(34.6%)	223건(50.6%)	0건	351건(42.3%)
중복없음	187건(50.5%)	194건(44.0%)	19건(100%)	400건(48.2%)
계	370건(44.6%)	441건(53.1%)	19건(2.3%)	830건(100%)

일부개정안은 830건 중 430건이 중복발의 되었고, 그 비율은 51.8%으로, 가설5.(일부개정안은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에 비해서 중복발의 비율은 낮고, ①의원 대안의 비중이 크며, ⑤정부중심 대안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와 일치하나, ①의원 대안보다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비중이 높고, 중복발의에 해당하는 ②의원 및 정부 대안 중 ④의원중심 대안은 9건(3.6%), ⑤정부중심 대안은 95건(38.5%), ⑥통합 대안은 143건(57.9%)으로 나타나고 있어, ④의원중심 대안의 비율이 제정이나 전부개

정 법률안에 비해 낮기는 하나, ⑤정부중심 대안 위주로 구성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5.(일부개정안은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에 비해서 중복발의 비율은 낮고, ①의원 대안의 비중이 크며, ⑤정부중심 대안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와는 배치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 적은 내용을 대상으로 개정을 하는 일부개정안의 특징 상, 의원 발의 법률안 간에 중복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법률을 개정하는 다른 내용의 정부발의 법률안이 별도로 제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비율이 높아지고, ⑥통합 대안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은 의원발의 법률 간 전체중복이 발생하였으나, 다른 내용의 정부발의 법률안과 합쳐지면서 ⑥통합 대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안을 제외하고 다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11>와 같다.

<표11> 법률 일부개정안의 중복발의 현황(수정)

	①의원 대안	②의원 및 정부 대안	③정부 대안	계
전체중복	42건(12.6%)	21건(6.3%)	0건	63건(9.2%)
일부중복	107건(32.1%)	178건(53.3%)	0건	285건(41.5%)
중복없음	184건(55.3%)	135건(40.4%)	19건(100%)	338건(49.3%)
계	333건(48.5%)	334건(48.7%)	19건(2.8%)	686건(100%)

수정 결과, ①의원 대안의 비중이 늘어났고, 중복발의된 199건의 ②의원 및 정부 대안 중 ④의원중심 대안은 6건(3.0%), ⑤정부중심 대안은 84건(42.2%), ⑥통합 대안은 109건(54.8%)으로 나타났다. ①의원 대안의 비중은 전체 평균 44.4%보다 높고(48.5%), ⑤정부중심 대안의 비중도 평

균(38.2%)보다 높은 것을 볼 때, 가설5.(일부개정안은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에 비해서 중복발의 비율은 낮고, ①의원 대안의 비중이 크며, ⑤정부중심 대안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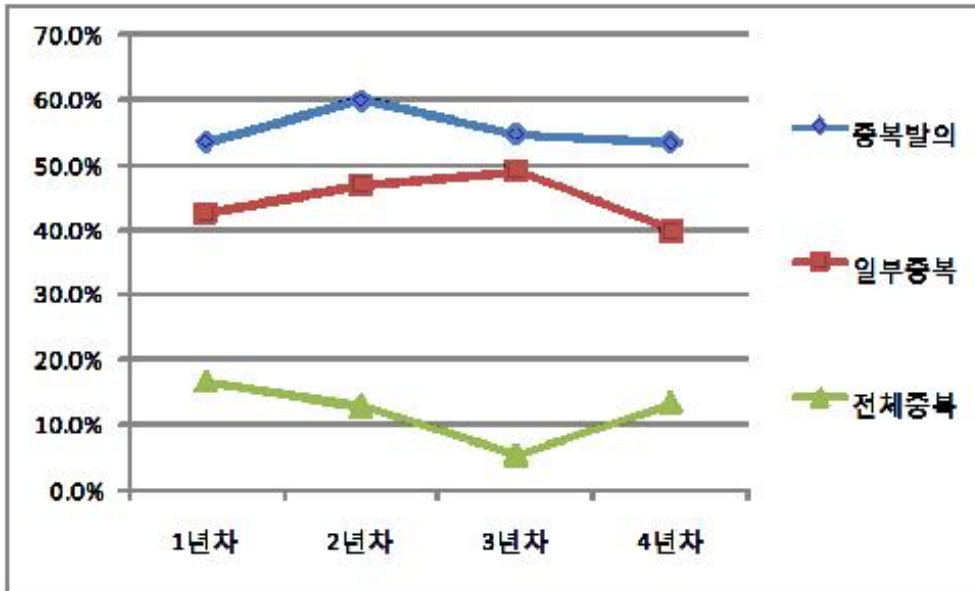
Ⅲ. 제안 시기에 따른 중복발의 비율

4년간의 국회의원 임기에 따른 중복발의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중복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12> 및 <그림1>과 같다.

<표12> 제안 시기별 중복발의 현황

제안 시기	전체중복	일부중복	중복없음	계	평균 중복 수
1년차 (2008.6.~2009.5.)	47건 (16.8%)	119건 (42.7%)	113건 (40.5%)	279건 (100%)	3.5건
	166건(59.5%)				
2년차 (2009.6.~2010.5.)	18건 (12.9%)	66건 (47.1%)	56건 (40.0%)	140건 (100%)	4.2건
	84건(60.0%)				
3년차 (2010.6.~2011.5.)	18건 (5.5%)	160건 (49.2%)	147건 (45.2%)	325건 (99.9%)	4.5건
	178건(54.8%)				
4년차 (2011.6.~2012.5.)	26건 (13.5%)	77건 (39.9%)	90건 (46.6%)	193건 (100%)	4.1건
	103건(53.4%)				
계	109건	422건	406건	937건	4.1건

<그림1> 제안 시기별 중복발의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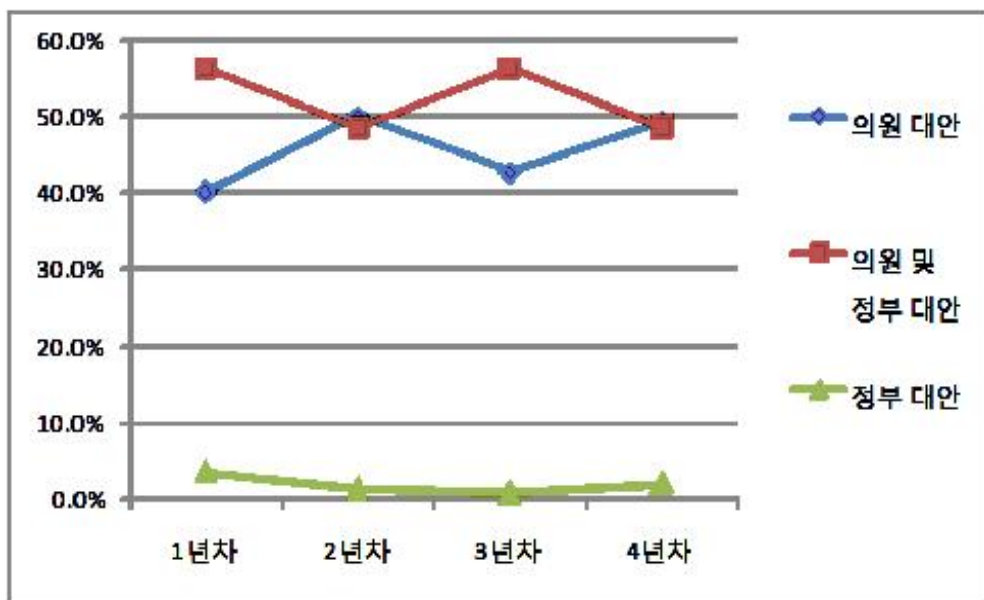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복발의 비율은 3~4년차에 들어서면서 낮아지는 하나, 제18대 국회 동안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것은 전체중복 법률안인데, 국회 초기에 높은 비율이던 전체중복 법률안이 2~3년차에 들어서면서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새로 국회에 진입한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의정경험이 늘어나면서 다른 법률안 전체를 참고하여 유사한 법률안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국회 마지막 연도에는 다시 증가하는데,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쟁점 대립이 없는 법률안을 모아서 처리하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 중복발의된 법률안 전체가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되어 있다면, 해당 법률안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립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법률안들이 국회 마지막 연도에 상대적으로 많이 처리된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 결과만을 가지고 국회의원의 입법 역량에 따른 중복발의 현황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제안 시기에 따라 대안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13> 및 <그림2>와 같다.

<표13> 제안 시기별 대안 분류

제안 시기	①의원 대안	②의원 및 정부 대안	③정부 대안	계
1년차 (2008.6.~2009.5.)	112건(40.1%)	157건(56.3%)	10건(3.6%)	279건 (100%)
2년차 (2009.6.~2010.5.)	70건(50.0%)	68건(48.6%)	2건(1.4%)	140건 (100%)
3년차 (2010.6.~2011.5.)	139건(42.7%)	183건(56.3%)	3건(0.9%)	325건 (99.9%)
4년차 (2011.6.~2012.5.)	95건(49.2%)	94건(48.7%)	4건(2.1%)	193건 (100%)
계	416건	502건	19건	937건

<그림2> 제안 시기별 대안 비율 변화



분석 결과, 1년차와 3년차에는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이 많이 나타나고, 2년차와 4년차에는 ①의원 대안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제안 시기에 따른 ①의원 대안 ②의원 및 정부 대안 ③정부 대안의 비율 변화는 특정한 경향성을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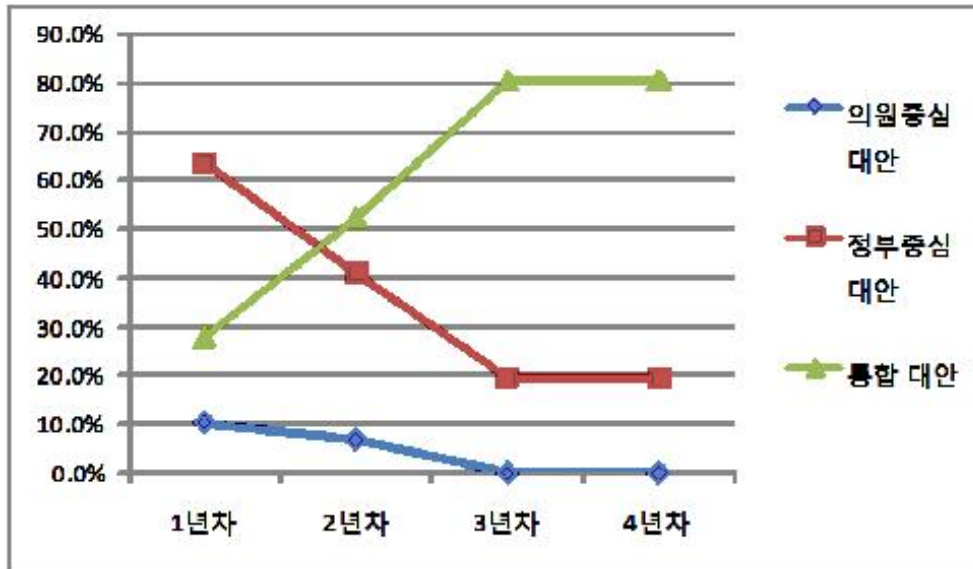
결국, 가설6.(국회가 진행될수록 중복발의 비율과 ①의원대안의 비율은 낮아질 것이다)과는 달리, 중복발의나 ①의원대안의 비율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일관된 경향은 없었고, 이러한 결과는 국회의 회기 진행에 따른 국회의원의 입법 역량이 중복발의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 중복발의를 나타나게 하는 다른 요인이 있음을 짐작하게 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제안 시기별로 전체중복 및 일부중복에 해당하는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을 ④의원중심 대안 ⑤정부중심 대안 ⑥통합 대안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14> 및 <그림3>과 같다.

<표14> 제안 시기별 ②의원 및 정부 대안 분류

제안 시기	④의원중심 대안	⑤정부중심 대안	⑥통합 대안	계
1년차 (2008.6.~2009.5.)	11건(10.3%)	68건(63.6%)	28건(26.2%)	107건(100.1%)
2년차 (2009.6.~2010.5.)	3건(6.8%)	18건(40.9%)	23건(52.3%)	44건(100%)
3년차 (2010.6.~2011.5.)	0건(0%)	20건(19.6%)	82건(80.4%)	102건(100%)
4년차 (2011.6.~2012.5.)	0건(0%)	10건(19.6%)	41건(80.4%)	51건(100%)

<그림3> 제안 시기별 ②의원 및 정부 대안 비율 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18대 국회 1년차에는 ⑤정부중심 대안이 주를 이루었으나, 2년차에는 ⑥통합 대안이 절반 이상으로 우세해졌고, 3년차 이후에는 ⑥통합 대안이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회 3년차 이후부터는 의원발의 법률안은 정부안에 일방적으로 편입될 만큼 질적으로 낮은 수준에서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고, 가설7.(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발의 법률안이 중복되는 경우, 국회 초반에는 ⑤정부중심 대안이 주를 이룰 것이나, 후반으로 가면 ④의원중심 대안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의 설명과도 부합한다. 다만, 국회 3년차 이후에는 ④의원중심 대안이 한 건도 없다는 점은 의원발의 법률안이 질적으로 크게 나아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가설7.(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발의 법률안이 중복되는 경우, 국회 초반에는 ⑤정부중심 대안이 주를 이룰 것이나, 후반으로 가면 ④의원중심 대안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어, 제안 시기와 중복발의의 관계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IV. 상임위원회별 중복발의 비율

상임위원회별 중복발의 현황 및 중복발의 법률안의 대안 구성 현황은 각각 다음 <표15> 및 <표16>과 같다.⁸⁵⁾

<표15> 상임위원회별 중복발의 현황

	①의원 대안	②의원 및 정부 대안	③정부 대안	계
교육과학기술 위원회	22건(40%)	27건(49%)	6건(11%)	55건(100%)
국방위원회	8건(40%)	12건(60%)	0건	20건(100%)

85) 18대 국회 기준으로 상임위원회별 담당 부처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	담당부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군사법원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2010. 3. 12.부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2010. 3. 11.까지)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2010. 3. 12.부터)
여성위원회	여성부(2010. 3. 11.까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국회
정부위원회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노동부
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 2012년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60건(42%)	77건(53.8%)	6건(4.2%)	143건(100%)
기획재정위원회	25건(32.5%)	50건(64.9%)	2건(2.6%)	77건(100%)
농림수산식품 위원회	41건(41.8%)	57건(58.2%)	0건	98건(100%)
문화체육관광통신 위원회	33건(60%)	22건(40%)	0건	55건(100%)
법제사법위원회	27건(51.9%)	25건(48.1%)	0건	52건(100%)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가족 위원회 포함)	47건(58%)	34건(42%)	0건	81건(100%)
여성가족위원회 (여성위원회 포함)	13건(65%)	7건(35%)	0건	20건(100%)
외교통상통일 위원회	9건(60%)	5건(33.3%)	1건(6.7%)	15건(100%)
운영위원회	3건(100%)	0건	0건	3건(100%)
정무위원회	25건(41.7%)	35건(58.3%)	0건	60건(100%)
정보위원회	1건(50%)	1건(50%)	0건	2건(100%)
지식경제위원회	31건(40.3%)	45건(58.4%)	1건(1.3%)	77건(100%)
행정안전위원회	44건(38.9%)	67건(59.3%)	2건(1.8%)	113건(100%)
환경노동위원회	17건(32.1%)	35건(66%)	1건(1.9%)	53건(100%)
특별위원회	10건(76.9%)	3건(23.1%)	0건	13건(100%)
계	416(44.4%)	502(53.6%)	19(2%)	937(100%)

<표16> 상임위원회별 중복발의 법률안의 대안 구성 현황

	④의원중심 대안	⑤정부중심 대안	⑥통합 대안	계
교육과학기술 위원회	0건	7건(36.8%)	12건(63.2%)	19건(100%)
국방위원회	0건	3건(50%)	3건(50%)	6건(100%)
국토해양위원회	4건(10.8%)	13건(35.1%)	20건(54.1%)	37건(100%)

기획재정위원회	1건(2.9%)	14건(40%)	20건(57.1%)	35건(100%)
농림수산물식품 위원회	0건	18건(54.5%)	15건(45.5%)	33건(100%)
문화체육관광통신 위원회	1건(5.6%)	5건(27.8%)	12건(66.7%)	18건(100.1%)
법제사법위원회	2건(12.5%)	5건(31.3%)	9건(56.3%)	16건(100.1%)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가족 위원회 포함)	0건	9건(33.3%)	18건(66.7%)	27건(100%)
여성가족위원회 (여성위원회 포함)	0건	2건(66.7%)	1건(33.3%)	3건(100%)
외교통상통일 위원회	0건	1건(50%)	1건(50%)	2건(100%)
운영위원회	0건	0건	0건	0건
정무위원회	3건(15.8%)	6건(31.6%)	10건(52.6%)	19건(100%)
정보위원회	0건	0건	0건	0건
지식경제위원회	0건	9건(37.5%)	15건(62.5%)	24건(100%)
행정안전위원회	2건(5%)	15건(37.5%)	23건(57.5%)	40건(100%)
환경노동위원회	0건	8건(34.8%)	15건(65.2%)	23건(100%)
특별위원회	1건(50%)	1건(50%)	0건	2건(100%)
계	14(4.6%)	116(38.2%)	174(57.2%)	304(100%)

대안의 수가 매우 적은 운영위원회(3건)와 정보위원회(2건), 특정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위원회의 결과를 제외하고 <표15>의 결과를 보면,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전체 평균(53.6%)보다 비율이 높은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수산물식품위원회, 정무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이고, 전체 평균보다 낮은 상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법

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포함), 여성가족위원회(여성위원회 포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며, 국토해양위원회는 평균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표16>의 결과에 따르면, ⑤정부중심 대안의 전체 평균(38.2%)보다 비율이 높은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수산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고, 전체 평균보다 낮은 상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부위원회이며, 평균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위원회는 지식경제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로 나타났다.

<표16>에서 중복발의 법률안의 수가 매우 적은 여성가족위원회(3건)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2건)를 제외하고 비교하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②의원 및 정부 대안과 ⑤정부중심 대안의 비율이 모두 평균보다 낮았고,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수산물위원회는 ②의원 및 정부 대안과 ⑤정부중심 대안의 비율이 모두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국토교통위원회, 정부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②의원 및 정부 대안과 ⑤정부중심 대안의 비율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중복발의의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8.(상임위원회별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의 중복발의 경향성이 나타날 것이다)과는 다른 것으로,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같은 상임위원회라 하더라도 처리하는 법률이나 정책의 성질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법률과 정책 자체의 성질을 기준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2절 Lowi의 정책유형에 따른 중복발의 현황

I. 정책유형에 따른 중복발의 현황

제18대 국회의 대안을 Lowi의 정책유형에 따라 중복발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17>과 같다.⁸⁶⁾

<표17> 정책유형에 따른 중복발의 현황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대안 수	54건	58건	58건	46건
평균 중복 수	7.0개	4.2개	4.6개	3.8개
전체중복	6건(11.1%)	3건(5.2%)	2건(3.4%)	13건(28.3%)
일부중복	29건(53.7%)	27건(46.6%)	32건(55.2%)	17건(37.0%)
중복없음	19건(35.2%)	28건(48.3%)	24건(41.4%)	16건(34.8%)
①의원 대안	22건(40.7%)	27건(46.6%)	22건(37.9%)	24건(52.2%)
②의원 및 정부 대안	32건(59.3%)	30건(51.7%)	34건(58.6%)	21건(45.7%)
③정부 대안	0건(0%)	1건(1.7%)	2건(3.4%)	1건(2.2%)

II. 정책유형에 따른 중복발의 비율

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 따라 대안을 분석한 결과, 중복되는 법률안의 수는 분배정책의 경우에 가장 많았고(7.0건), 규제정책과 재분배정책은

86) 정책유형에 따른 전체 분석 결과는 부록 2.부터 부록 5.까지 참조

비슷했으며, 구성정책은 가장 낮게 나타나(3.8건)고 있다. 가설9.(대안으로 통합되는 법률안의 수는 분배정책 > 규제정책 > 재분배정책 > 구성정책의 순으로 많을 것이다)과 유사한 결과이기는 하나, 규제정책의 발의 건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유권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제정책에 대한 발의의 적극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중복발의의 비율을 보면, 구성정책(65.2%)과 분배정책(64.8%)이 비교적 중복발의 비율이 높고, 재분배정책(58.6%)과 규제정책(51.7%) 순으로 중복발의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가설10.(중복발의 비율은 분배정책 > 재분배정책 > 규제정책 > 구성정책의 순으로 높을 것이다)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구성정책의 중복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Lowi의 분류가 가지는 한계로 인한 것으로, 형식은 구성정책이나 실질은 분배정책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법률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구의 개발과 연결되어 있어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률안이고, 「공직선거법」은 외국 거주자 등에게 선거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중복 발의되었는데, 이 역시 국회를 구성의 방법을 정하는 구성정책이면서도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분배정책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대안의 성격을 보면, 전체 대안 중 ①의원 대안의 평균 비율인 44.4%를 기준으로, 분배정책(40.7%)과 재분배정책(37.9%)은 ①의원 대안의 비율이 낮고, 규제정책(46.6%)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며, 구성정책(52.2%)은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설11.(대안의 분류에 있어, ①의원 대안 비율은 분배정책 > 재분배정책 > 규제정책 > 구성정

책 순으로 높을 것이다)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분배정책은 의원들의 중복발의 유인이 강하지만, 정부도 다양한 지원책을 발의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의원발의 입법과 정부발의 입법이 통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재분배정책은 부의 이전을 초래하므로 정책의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고, 따라서 의원발의만으로 법률을 통과시키기보다는 정부발의 법률안과의 통합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불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규제정책의 ①의원 대안 비율이 낮지 않은 것은 특정 정책의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시키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안을 국회의원들이 중복하여 발의할 유인을 가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규제정책 대안 중 「의료기기법」은 의사들의 리베이트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이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결혼이주여성에게 결혼중개업체에게 받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이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원 대안이 만들어진 것을 볼 때, 규제정책이라 할지라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원발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성정책의 경우에도 ①의원 대안 비율이 높는데,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구성정책이면서도 분배정책의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외에, 정부가 발의하지 못하는 입법부, 사법부, 독립기관 등에 관한 법률안(「국회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해당 법률들을 제외하면 ①의원 대안 비율은 43.2%의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 국회의 역할 중 하나가 행정부 견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가 구성정책을 통해 행정부를 어느 정도 견제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

다.

Ⅲ. 정책유형에 따른 대안의 통합 방식

정책유형에 따른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통합 방식은 다음 <표18>과 같다.

<표18> 정책유형에 따른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통합 방식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④의원중심 대안	2건(9.1%)	0건(0%)	1건(4.8%)	0건(0%)
⑤정부중심 대안	6건(27.3%)	4건(22.2%)	5건(23.8%)	5건(35.7%)
⑥통합 대안	14건(63.6%)	14건(77.8%)	15건(71.4%)	9건(64.3%)
계	22건(100%)	18건(100%)	21건(100%)	14건(100%)

분석 결과는 가설 12.(정책유형에 따른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통합 형태는 분배정책의 경우 ④의원중심 대안의 비율이 높고, 규제정책은 ⑤정부중심 대안, 재분배정책은 ⑥통합 대안, 구성정책은 ⑤정부중심 대안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분배정책의 경우,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 중복발의 유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④의원중심 대안, ⑤정부중심 대안, ⑥통합 대안이 가장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규제정책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중복발의 유인이 낮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한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법률안을 중복발의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⑥통합 대안의 비중이 높고, 재분배정책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섬세한 조정을 필요로 하는 정책의 특성 상 ⑥통합 대안의 비

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성정책의 경우에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면서도 국회의 견제 결과 전체 평균(38.2%)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부중심 대안으로 통합되고 있다.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정리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①의원 대안보다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비중이 높고, ③정부 대안은 비중이 매우 낮을 것이다)의 경우, 분석 대상 937건 중 ①의원 대안은 416건(44.4%)로,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은 502개(53.6%), ③정부 대안은 19개(2.0%)로, 분석 결과는 가설1.을 뒷받침하고 있다(채택).

분석1. ①의원 대안보다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비중이 높고, ③정부 대안은 비중이 매우 낮다.

가설2.(법률안이 중복되는 경우, ①의원 대안은 ②의원 및 정부 대안에 비해 법률안 전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은 법률안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의 경우, 전체중복 법률안은 ①의원 대안이 ②의원 및 정부 대안에 비해 약 3배 많게 나타나고, 일부중복 법률안은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이 ①의원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설2.와 일치한다(채택).

분석2. 법률안이 중복되는 경우, ①의원 대안은 ②의원 및 정부 대안에 비해 법률안 전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은 법률안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가설3.(⑤정부중심 대안 > ⑥통합 대안 > ④의원중심 대안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의 경우, ⑤정부중심 대안의 수 보다 ⑥통합 대안의 수가 많으나, ④의원중심 대안은 ⑤정부중심 대안이나 ⑥통합 대안에 비해 드물게 나타나고 있어, 가설3.과 완전히 배치되지는 않고 있다(수정).

분석3. ⑥통합 대안 > ⑤정부중심 대안 > ④의원중심 대안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④의원중심 대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가설4.(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은 중복발의 비율이 높고,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비중이 크며, ⑤정부중심 대안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일 것.)의 경우,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제정안은 중복발의 비율이 98.2%이나, ①의원 대안의 비율이 높고, ⑤정부중심 대안으로 포섭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설4.와는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수정).

분석4-1. 제정안은 중복발의 비율(특히, 전체중복 비율)이 높고, ①의원 대안의 비중이 크며, ⑤정부중심 대안으로 구성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전부개정안은 중복발의 비율이 90.2%이고,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비율이 높고, ⑤정부중심 대안 위주의 입법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가설4.와 일치한다(채택).

분석4-2. 전부개정안은 중복발의 비율(특히, 일부중복 비율)이 높고,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비중이 크며, ⑤정부중심 대안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가설5.(일부개정안은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에 비해서 중복발의 비율

은 낮고, ①의원 대안의 비중이 크며, ⑤정부중심 대안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의 경우, 일부개정법률의 중복률의 51.8%이고, ①의원 대안의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으며, ⑤정부중심 대안의 비중도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설5를 지지하고 있다(채택).

분석5. 일부개정법률은 제정법률이나 전부개정법률에 비해서 중복률의 비율은 낮고(일부중복 비율 높음), ①의원 대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며, ⑤정부중심 대안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가설6.(국회가 진행될수록 중복률의 비율과 ①의원대안의 비율은 낮아질 것이다)의 경우, 제안 시기별 ①의원 대안 ②의원 및 정부 대안 ③정부 대안의 비율이 특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가설6.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기각).

분석6. 국회의 진행 상황에 따른 중복률의 비율과 ①의원대안의 비율 간에는 명확한 관계가 없다.

가설7.(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발의 법률안이 중복되는 경우, 국회 초반에는 ⑤정부중심 대안이 주를 이룰 것이나, 후반으로 가면 ④의원중심 대안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의 경우, 제18대 국회 1년차에는 ⑤정부중심 대안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후에는 ⑥통합 대안이 주로 나타나고, 국회 3년차 이후에는 ④의원중심 대안이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아 가설7.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수정).

분석7.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발의 법률안이 중복되는 경우, 국회 초반에는 ⑤정부중심 대안이 주를 이루나, 후반에는 ⑥통합 대안의 비율이 높아지고, 3년차 이후 ④의원중심 대안은 나타나지 않았다.

가설8.(상임위원회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의 중복발의 경향성이 나타날 것이다.)의 경우, 상임위원회별로 ②의원 및 정부 대안과 ⑤정부중심 대안의 비중이 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복발의의 경향성이 있다고 어려웠다(기각).

분석8. 상임위원회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의 중복발의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가설9.(대안으로 통합되는 법률안의 수는 분배정책 > 규제정책 > 재분배정책 > 구성정책의 순으로 많을 것이다)의 경우, 중복되는 법률안의 수는 분배정책의 경우에 가장 많았고, 재분배정책이 구성정책보다 약간 많았으며, 규제정책은 가장 낮게 나타나, 가설9.와 유사하지만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수정).

분석9. 대안으로 통합되는 법률안의 수는 분배정책 > 재분배정책 ≥ 규제정책 > 구성정책의 순으로 많다.

가설10.(중복발의 비율은 분배정책 > 재분배정책 > 규제정책 > 구성정책의 순으로 높을 것이다.)의 경우, 구성정책과 분배정책이 비교적 중복발의 비율이 높고, 재분배정책과 규제정책 순으로 중복발의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구성정책을 제외하면 가설10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수정).

분석10. 중복발의 비율은 구성정책 > 분배정책 > 재분배정책 > 규제정책의 순으로 높다.

가설11.(대안의 분류에 있어, ①의원 대안 비율은 분배정책 > 재분배정책 > 규제정책 > 구성정책 순으로 높을 것이다)의 경우,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은 ①의원 대안의 비율이 낮고, 우호적인 여론을 위해 발의하

는 경우가 많은 규제정책은 평균 수준이며, 정부 전체의 수단이기도 한 구성정책은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설11.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수정).

분석11. 대안의 분류에 있어, ①의원 대안 비율은 구성정책 > 규제정책 > 분배정책 > 재분배정책 순으로 높다.

가설12.(정책유형에 따른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통합 형태는 분배정책의 경우 ④의원중심 대안의 비율이 높고, 규제정책은 ⑤정부중심 대안, 재분배정책은 ⑥통합 대안, 구성정책은 ⑤정부중심 대안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의 경우, 분배정책은 의화와 정부의 정책의지가 모두 반영되면서 ④의원중심 대안, ⑤정부중심 대안, ⑥통합 대안이 가장 고르게 나타나고, 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규제정책과 재분배정책은 ⑥통합 대안의 비율이 높았으며, 구성정책은 상대적으로 ⑤정부중심 대안으로 통합되는 경우가 많았다(수정).

분석12. 정책유형에 따른 ②의원 및 정부 대안의 통합 형태는 분배정책의 경우 ④의원중심 대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규제정책은 ⑥통합 대안, 재분배정책은 ⑥통합 대안, 구성정책은 ⑤정부중심 대안의 비율이 높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해서 의원발의 법률안은 정부제출 법률안과 대안을 이루는 경우가 많고(분석1), 내용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동등하게 통합되거나 정부제출 법률안 중심으로 통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분석3).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법률안의 평균적인 질은 정부제출 법률안이 조금 더 낮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의원발의 법률안의 ‘배끼기’에 관해서는, 의원발의 법률안끼리 대

안을 구성할 때 전부중복 비율이 높았고(분석2),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법률 제정안의 경우에 의원발의 법률안의 전부중복이 많았다는 점을 볼 때(분석4-1), 의원발의 법률안이 서로를 참조하여 만들어지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국회의원들은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정교한 개정작업보다는 손쉽게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쪽을 선호하고 있으며(분석4-1), 법률 전체를 검토하는 난이도 높은 개정 작업을 기피한다는 점(분석4-2)은 의원들과 보좌관의 입법 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의 의원발의 법률안의 품질에 대한 지적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부개정 법률안의 경우에도 정부제출 법률안에 비해 참고하기가 쉬운 의원발의 법률안끼리 중복이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분석5)을 볼 때, 베끼기 입법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유사한 법률안을 국회의원들이 양산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원의 입법 역량과 관련하여 국회 회기 진행에 따른 중복발의 현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해 보려 하였으나, 입법 역량 외의 다른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연관성을 판단할 수 없었고(분석6, 분석7), 상임위원회와 중복발의와의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분석8). 이는 중복발의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정책유형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정책유형을 통한 중복발의의 분석 결과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특정 집단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법률을 적극적으로 발의하는 유인이 있는 한편(분석9, 분석10), 특정 집단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더라도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거나 일반적인 평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기꺼이 관련된 법률안을 발의하고 있었고(분석11), 유권자 지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에서도 정부 견제의 차원에서 중복발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분석11). 이러한 결과는 중복발의가 단순히 지역구 유권자만을 바라보는 행위가 아니며,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전략적 행위임을 의미하고, 무엇보다도 중복발의를 법률안 발의 개수를 늘여 좋은 평가를 받겠다는 단순한 논리로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특정 집단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정책 발의에 적극적이었는데(분석12), 국회의원과 같은 재선의 유인은 없지만 정부와 대통령 역시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는 계속 국민의 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법률안이 정부 주도로 통합되는 비율이 높았다는 점(분석12)은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평가와 전망

본 연구에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지적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법률안 중복발의 현황을 통해 검증을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기존의 문제 지적은 상당 부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대안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책주도권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의 입법이 행정부의 전문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중복

시 어느 쪽이 우선하지 않는 통합 대안의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있다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새롭게 대두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정안의 경우에는 의원발의 입법이 상당 부분 주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요구에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입법 절차적인 개선을 통해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기존의 시도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부제출 법률안과는 다른 강점을 지니고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는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통제를 강화하게 되면 유사한 법률안이 발의되는 것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정부가 대응하지 못하는 영역, 혹은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한 국회의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의원발의 입법의 강점을 희석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정책유형에 따른 중복발의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절차 개선을 통해 유사·중복 대안의 발의를 막아보겠다는 접근 방법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국회의원의 중복발의는 입법 과정에서의 통제 실패라기보다는 득표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므로, 절차적 개선과는 별개로 재선을 위한 국회의원의 중복발의는 분배정책이나 규제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과는 다른 방식의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루었던 국회와 정부의 협력 강화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분배정책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도 국회 못지않게 편익분배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고, 모든 정책 유형에서 정부와의 정책 결합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요구

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장점과 집행가능성과 완성도가 높고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이나 정밀한 법률안 체계 검토에 강점이 있는 정부발의 법률안의 장점을 살린 입법 절차와 협력 방안의 모색을 통해 법률안의 질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이제야 국회가 입법을 주도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다시 정부와의 협력을 논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불편함의 결과, 과거의 정부가 사용하던 다양한 국회-정부간 협력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공식적인 방법 협력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안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발의하는, 소위 말하는 “정부입법”을 들 수 있다. 정부입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 실질에 대해서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양자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은 틀림없다고 본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협력의 문제점과 한계를 논하고, 양질의 법률안을 만들기 위한 협치의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의 입법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관념적으로만 논의되던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적 저하 문제를 중복발의 현황 분석을 통해 그 실질을 파악하였고, 의원발의 법률안은 질적으로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으나, 국회의원의 재선 추구가 계속되는 이상 지금까지의 개선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성과가 있었다. 다만, 어느 정도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드러내지는 못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는 작업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는 제18대 국회의 대안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한계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과거 국회의 중복발의 현황, 얼마 전 임기가 종료된 제20대 국회의 중복발의 현황 등이 파악되면 시간에 따른 중복발의의

변화 양상과 그 원인을 보다 더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법제처(편), 『법제업무편람』, 법제처, 2013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1

고기동·이은국·이은미,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입법화 과정 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4권 4호, 2015

고문현, “국회입법기능의 정상화와 역할 강화방안”, 법학논고 제46집,
2014

김경동, “의원입법의 민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법학박
사학위 논문, 2014

김광수, “의원입법의 영향과 책임성”, 행정법연구, 2005

김유환, “정부입법효율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법제업무 지원·조정기능
강화방안 연구”, 법제처 연구용역 보고서, 2007

김준석, “입법시간과 입법결과의 경쟁위험분석(Competing Risks
Analysis): 18대 국회 접수의안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1권3호,
2012

목진휴 외, “우리나라 국회의 법률안 처리속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
구원 연구보고서 2007-37, 2007

서기영, “세법 입법과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
문, 2008

윤종빈, 김윤실, 정희수, “현직의원의 득표율 증감 분석: 제19대 총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6권 2호, 2015

이지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직접적 통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1999

이현출·김준석, “가결과 부결의 이분법을 넘어: 17대 국회의 입법시간과 처리결과에 대한 경쟁위험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제5호, 2012

전태희,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영국법과 우리법의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2

전학선,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의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07

정극원, “의원입법 부실화의 원인과 내실화의 방안”, 세계헌법연구 제18권 2호, 2012

_____, “의원입법의 증가에 따른 국회입법조직의 효율화 방안”, 공법학연구 제16권, 2015

정준호, “의원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5

조정찬, “입법환경의 변화와 입법절차 상의 개선방안”, 법제 통권 제626호, 2010

최윤철, “의원입법 질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2012

표시열, “행정부의 정책결정 주도에 대한 사법적 견제방안과 그 한계: 한·미 위헌법률심판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05권 0호, 2005

홍완식,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2008

홍익표,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입법절차상의 적법절차”, 공법학연구 창간호, 1999

Mahews, D. R. “Congressional Elections: the case of the vanishing marginals”, Polity 6, 1974

Lowi, Theodore J. “American Business, Public Policy, Case-Studies and Political Theory”, World Politics Vol.16, 1964

_____, “Fou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PAR vol.32, 197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부록

1. 제18대 국회 대안의 중복발의 분석 결과⁸⁷⁾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1	2008.9.	일부	보가위	의료법	2	①		전체 중복
2	2008.11.	일부	법사위	출입국관리법	2	①		중복 없음
3	2008.11.	일부	지경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	3	①		중복 없음
4	2008.11.	일부	지경위	전기공사업법	2	②	⑤	일부 중복
5	2008.11.	일부	보가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	①		전체 중복
6	2008.12.	일부	농수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	2	②	⑥	중복

87)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약칭은 다음과 같다.

약칭	위원회명	약칭	위원회명
보가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외통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	정보위원회
지경위	지식경제위원회	문방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수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교과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토위	국토해양위원회	여성위	여성위원회
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	여가위	여성가족위원회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	보건위	보건복지위원회
기재위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	정무위원회	국방위	국방위원회
정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기후특위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		
지원특위	2012년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출산특위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정에 관한 법률				없음
7	2008.12.	일부	국토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3	①		전체 중복
8	2008.12.	일부	지경위	중소기업기본법	2	①		중복 없음
9	2008.12.	일부	행안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	②	⑤	전체 중복
10	2008.12.	일부	행안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	①		전체 중복
11	2008.12.	일부	행안위	자연재해대책법	2	①		일부 중복
12	2008.12.	일부	기재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	4	②	⑥	일부 중복
13	2008.12.	일부	기재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①		일부 중복
14	2008.12.	일부	정무위	전자금융거래법	2	①		중복 없음
15	2008.12.	일부	국방위	군무원인사법	2	①		중복 없음
16	2008.12.	일부	국방위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2	①		전체 중복
17	2008.12.	일부	행안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법	2	①		중복 없음
18	2008.12.	일부	국토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5	①		일부 중복
19	2008.12.	일부	국토위	주차장법	2	②	⑤	전체 중복
20	2008.12.	일부	정무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21	2008.12.	일부	행안위	지방공무원법	4	②	⑤	일부 중복
22	2008.12.	일부	행안위	국가공무원법	3	②	⑥	중복 없음
23	2008.12.	일부	지경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5	①		일부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촉진에 관한 법률				중복
24	2008.12.	일부	기재위	국세징수법	2	②	⑤	전체 중복
25	2008.12.	일부	기재위	개별소비세법	4	②	⑤	전체 중복
26	2008.12.	일부	기재위	관세법	2	②	⑥	중복 없음
27	2008.12.	일부	기재위	종합부동산세법	9	②	⑤	일부 중복
28	2008.12.	일부	기재위	부가가치세법	4	②	⑤	일부 중복
29	2008.12.	일부	기재위	소득세법	11	②	⑤	일부 중복
30	2008.12.	일부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37	②	⑥	일부 중복
31	2008.12.	일부	기재위	법인세법	5	②	⑤	일부 중복
32	2009.1.	일부	기재위	외국환거래법	2	②	⑤	전체 중복
33	2009.1.	일부	기재위	한국수출입은행법	2	②	⑥	중복 없음
34	2009.1.	일부	보가위	국민연금법	4	①		일부 중복
35	2009.1.	일부	보가위	혈액관리법	2	①		중복 없음
36	2009.1.	일부	외통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	①		일부 중복
37	2009.1.	일부	보가위	의료법	5	②	⑤	일부 중복
38	2009.1.	일부	국방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	②	⑤	전체 중복
39	2009.1.	일부	국방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②	⑤	전체 중복
40	2009.1.	일부	정무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②	⑤	전체 중복
41	2009.1.	일부	지경위	에너지기본법	2	②	⑤	전체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중복
42	2009.1.	일부	지경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	②	⑥	중복 없음
43	2009.1.	일부	지경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	②	⑤	일부 중복
44	2009.1.	일부	정무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 원 등에 관한 법률	3	②	④	일부 중복
45	2009.1.	전부	기재위	국유재산법	4	②	⑤	일부 중복
46	2009.1.	일부	정보위	국가정보원직원법	2	①		일부 중복
47	2009.1.	일부	기재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3	②	⑥	일부 중복
48	2009.1.	일부	기재위	국세기본법	2	①		전체 중복
49	2009.1.	일부	행안위	공직자윤리법	3	②	⑤	전체 중복
50	2009.1.	일부	행안위	국가공무원법	3	①		전체 중복
51	2009.1.	일부	행안위	지방공무원법	2	①		전체 중복
52	2009.1.	일부	행안위	지방교부세법	5	②	⑤	일부 중복
53	2009.1.	일부	행안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②	⑤	일부 중복
54	2009.1.	일부	행안위	지방세법	4	①		전체 중복
55	2009.1.	전부	농수위	식품위생법	8	②	⑥	일부 중복
56	2009.1.	일부	국토위	주택법	7	②	⑥	중복 없음
57	2009.1.	일부	국토위	선원법	2	①		중복 없음
58	2009.1.	일부	국토위	도선법	2	③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없음
59	2009.1.	일부	정무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②	⑤	전체 중복
60	2009.1.	일부	정무위	예금자보호법	3	②	⑥	일부 중복
61	2009.1.	일부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7	②	⑤	일부 중복
62	2009.1.	일부	문방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	②	⑤	일부 중복
63	2009.1.	일부	문방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①		일부 중복
64	2009.1.	일부	정무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3	①		전체 중복
65	2009.1.	일부	정무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②	⑤	일부 중복
66	2009.1.	일부	교과위	고등교육법	2	①		중복 없음
67	2009.1.	일부	국토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①		중복 없음
68	2009.2.	일부	정개 특위	주민투표법	2	①		전체 중복
69	2009.2.	일부	정개 특위	공직선거법	7	①		전체 중복
70	2009.2.	일부	농수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71	2009.2.	전부	농수위	농어업재해보험법	2	②	⑤	전체 중복
72	2009.2.	일부	문방위	저작권법	3	①		중복 없음
73	2009.2.	일부	문방위	도서관법	2	①		일부 중복
74	2009.2.	일부	지경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	①		일부 중복
75	2009.2.	일부	국토위	임대주택법	2	①		중복 없음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76	2009.2.	일부	농수위	친환경농업육성법	2	②	⑥	중복 없음
77	2009.2.	제정	농수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②	⑤	전체 중복
78	2009.2.	일부	지원 특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 원특별법	2	①		중복 없음
79	2009.2.	일부	기재위	국가재정법	2	①		일부 중복
80	2009.2.	일부	기재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81	2009.2.	일부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4	①		일부 중복
82	2009.2.	일부	지경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	②	⑥	중복 없음
83	2009.2.	일부	지경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 한 규제특별법	2	②	⑥	중복 없음
84	2009.2.	일부	지경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 한 특별법	3	①		중복 없음
85	2009.2.	제정	보가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①		전체 중복
86	2009.2.	일부	문방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87	2009.2.	일부	문방위	국민체육진흥법	4	①		중복 없음
88	2009.2.	일부	문방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89	2009.2.	일부	문방위	관광진흥법	5	②	⑥	일부 중복
90	2009.2.	제정	법사위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별법	1	③		중복 없음
91	2009.3.	일부	행안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3	②	⑤	일부 중복
92	2009.3.	일부	행안위	경비업법	1	①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없음
93	2009.3.	일부	국토위	건축법	2	①		중복 없음
94	2009.3.	일부	국토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95	2009.3.	일부	국방위	방위사업법	2	②	⑥	중복 없음
96	2009.3.	일부	정무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②	⑥	일부 중복
97	2009.3.	일부	지경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7	②	⑥	일부 중복
98	2009.3.	일부	국토위	교통안전법	3	②	⑥	중복 없음
99	2009.3.	일부	국토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①		전체 중복
100	2009.3.	일부	기재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	2	①		중복 없음
101	2009.3.	제정	교과위	한국연구재단법	2	②	⑥	전체 중복
102	2009.3.	일부	행안위	지방자치법	3	②	⑤	일부 중복
103	2009.3.	일부	정무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3	②	⑥	중복 없음
104	2009.3.	일부	국토위	도로교통법	2	②	⑥	중복 없음
105	2009.3.	일부	정무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8	②	④	일부 중복
106	2009.3.	일부	문방위	경륜·경정법	4	②	⑥	전체 중복
107	2009.4.	일부	농수위	축산물가공처리법	3	①		중복 없음
108	2009.4.	일부	농수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109	2009.4.	일부	여성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2	②	⑥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없음
110	2009.4.	일부	농수위	농산물품질관리법	2	①		중복 없음
111	2009.4.	일부	문방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9	②	④	일부 중복
112	2009.4.	전부	법사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	②	④	전체 중복
113	2009.4.	일부	법사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①		전체 중복
114	2009.4.	일부	법사위	가사소송법	2	①		일부 중복
115	2009.4.	일부	법사위	주택임대차보호법	4	①		일부 중복
116	2009.4.	일부	지경위	전기사업법	2	②	⑥	중복 없음
117	2009.4.	일부	지경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2	①		전체 중복
118	2009.4.	일부	지경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	②	⑥	중복 없음
119	2009.4.	일부	농수위	산지관리법	2	①		중복 없음
120	2009.4.	일부	농수위	농업협동조합법	4	②	⑤	일부 중복
121	2009.4.	일부	농수위	농지법	3	②	⑤	일부 중복
122	2009.4.	일부	농수위	한국마사회법	4	②	⑥	일부 중복
123	2009.4.	일부	국방위	병역법	2	②	⑥	중복 없음
124	2009.4.	일부	행안위	지방세법	2	②	⑥	중복 없음
125	2009.4.	일부	기재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3	①		일부 중복
126	2009.4.	일부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4	②	⑤	일부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127	2009.4.	일부	기재위	관세법	3	①		전체 중복
128	2009.4.	일부	문방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4	①		중복 없음
129	2009.4.	제정	농수위	식생활교육지원법	2	①		전체 중복
130	2009.4.	일부	농수위	어선법	2	①		중복 없음
131	2009.4.	일부	농수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3	②	⑥	중복 없음
132	2009.4.	일부	국토위	해상교통안전법	3	②	⑤	전체 중복
133	2009.4.	일부	국토위	항공법	2	②	⑥	중복 없음
134	2009.4.	일부	국토위	선박투자회사법	2	②	⑥	중복 없음
135	2009.4.	제정	국토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 에 관한 법률	3	②	⑤	일부 중복
136	2009.4.	일부	환노위	대기환경보전법	2	①		중복 없음
137	2009.4.	일부	국토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 한 법률	3	②	⑥	중복 없음
138	2009.4.	일부	국토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	①		중복 없음
139	2009.4.	일부	국토위	도로법	3	②	⑥	중복 없음
140	2009.4.	일부	국토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①		일부 중복
141	2009.4.	일부	정무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3	①		일부 중복
142	2009.4.	전부	행안위	국가정보화 기본법	3	②	⑤	일부 중복
143	2009.4.	일부	정무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②	⑥	일부 중복
144	2009.4.	일부	보가위	국민연금법	4	①		전체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중복
145	2009.4.	일부	문방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3	②	⑤	일부 중복
146	2009.4.	일부	보가위	국민건강보험법	3	①		전체 중복
147	2009.4.	일부	보가위	긴급복지지원법	4	②	⑤	일부 중복
148	2009.4.	일부	보가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	②	⑥	일부 중복
149	2009.4.	일부	지경위	디자인보호법	2	②	⑥	중복 없음
150	2009.4.	일부	국토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에 관한 특별법	2	①		중복 없음
151	2009.4.	일부	국토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	①		중복 없음
152	2009.4.	일부	국토위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 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2	③		중복 없음
153	2009.4.	전부	국토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	②	⑤	일부 중복
154	2009.4.	일부	국토위	개항질서법	2	③		중복 없음
155	2009.4.	일부	농수위	농산물품질관리법	2	②	⑥	중복 없음
156	2009.4.	전부	농수위	농어촌정비법	2	②	⑤	일부 중복
157	2009.4.	일부	환노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	①		일부 중복
158	2009.4.	일부	국토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3	②	⑤	일부 중복
159	2009.4.	일부	교과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 한 특별법	5	②	⑥	일부 중복
160	2009.4.	일부	국토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3	②	④	일부 중복
161	2009.4.	일부	환노위	직업안정법	3	②	⑤	일부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162	2009.4.	일부	환노위	산업안전보건법	2	①		중복 없음
163	2009.4.	일부	환노위	청년교육촉진 특별법	5	②	⑤	일부 중복
164	2009.4.	일부	환노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3	②	⑥	일부 중복
165	2009.4.	일부	국토위	항만운송사업법	2	③		중복 없음
166	2009.4.	일부	외통위	남북협력기금법	2	②	⑥	중복 없음
167	2009.4.	일부	외통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2	②	⑥	중복 없음
168	2009.4.	일부	기재위	소득세법	5	②	⑥	중복 없음
169	2009.4.	일부	지원 특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및2014인천아시아경 기대회지원법	4	①		중복 없음
170	2009.9.	일부	법사위	검사징계법	2	②	⑥	중복 없음
171	2009.9.	일부	법사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	2	②	⑥	중복 없음
172	2009.9.	일부	법사위	균형법	7	②	⑥	일부 중복
173	2009.11.	일부	법사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2	①		중복 없음
174	2009.11.	일부	지경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 에관한특별법	2	①		중복 없음
175	2009.11.	일부	지경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	①		중복 없음
176	2009.11.	일부	지경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2	①		일부 중복
177	2009.11.	일부	기재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178	2009.11.	일부	국토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2	①		일부 중복
179	2009.11.	일부	국토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180	2009.11.	일부	국토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181	2009.11.	일부	국토위	도시개발법	5	②	④	일부 중복
182	2009.11.	일부	국토위	임대주택법	3	①		일부 중복
183	2009.11.	일부	국토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 별법	2	①		중복 없음
184	2009.11.	일부	국토위	택지개발촉진법	2	②	⑥	중복 없음
185	2009.11.	일부	국토위	교통안전법	2	①		중복 없음
186	2009.11.	일부	국토위	자동차관리법	4	①		중복 없음
187	2009.11.	일부	국토위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 진법	2	①		중복 없음
188	2009.11.	일부	국토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 용촉진에 관한 법률	2	①		전체 중복
189	2009.11.	일부	국토위	선박법	5	②	④	일부 중복
190	2009.11.	일부	국토위	선박안전법	2	②	⑥	중복 없음
191	2009.11.	일부	국토위	해양환경관리법	2	②	⑥	중복 없음
192	2009.11.	일부	국토위	해양교통안전법	3	①		일부 중복
193	2009.11.	일부	국토위	선박직원법	2	②	⑥	중복 없음
194	2009.11.	일부	기재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②	⑤	일부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195	2009.11.	전부	보가위	검역법	2	②	⑤	전체 중복
196	2009.11.	전부	보가위	전염병예방법	12	②	⑤	일부 중복
197	2009.12.	일부	지경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2	①		중복 없음
198	2009.12.	일부	행안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 한 법률	6	①		일부 중복
199	2009.12.	일부	행안위	도로교통법	5	①		일부 중복
200	2009.12.	일부	법사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3	①		일부 중복
201	2009.12.	일부	법사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 한절차에 관한 법률	2	②	⑤	전체 중복
202	2009.12.	일부	국토위	건설산업기본법	8	②	⑥	일부 중복
203	2009.12.	일부	국토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	①		전체 중복
204	2009.12.	제정	기후 특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	②	④	일부 중복
205	2009.12.	일부	법사위	헌법재판소법	2	①		중복 없음
206	2009.12.	일부	국방위	병역법	6	①		일부 중복
207	2009.12.	일부	지경위	도시가스사업법	4	①		중복 없음
208	2009.12.	일부	지경위	우편환법	2	②	⑥	중복 없음
209	2009.12.	일부	지경위	광업법	5	②	⑥	일부 중복
210	2009.12.	일부	지경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4	②	⑥	중복 없음
211	2009.12.	일부	지경위	특허법	2	①		일부 중복
212	2009.12.	일부	농수위	축산법	3	②	⑤	일부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중복
213	2009.12.	일부	농수위	비료관리법	2	①		중복 없음
214	2009.12.	일부	농수위	식품산업진흥법	3	①		중복 없음
215	2009.12.	일부	농수위	수의사법	3	②	⑤	일부 중복
216	2009.12.	일부	농수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2	②	⑤	일부 중복
217	2009.12.	일부	농수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 별법	3	②	⑤	일부 중복
218	2009.12.	일부	농수위	농어업재해대책법	4	①		전체 중복
219	2009.12.	일부	농수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	②	⑤	일부 중복
220	2009.12.	일부	국방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 속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221	2009.12.	일부	국방위	향토예비군 설치법	2	②	⑥	중복 없음
222	2009.12.	일부	법사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6	②	④	일부 중복
223	2009.12.	일부	농수위	기르는 어업육성법	2	①		전체 중복
224	2009.12.	일부	농수위	수산물품질관리법	4	①		중복 없음
225	2009.12.	일부	농수위	수산업법	4	②	⑥	중복 없음
226	2009.12.	일부	농수위	어촌·어항법	2	①		중복 없음
227	2009.12.	일부	국토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 정평가에 관한 법률	2	②	⑤	일부 중복
228	2009.12.	일부	국토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4	②	⑤	일부 중복
229	2009.12.	일부	행안위	청원경찰법	3	②	⑥	일부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230	2009.12.	일부	행안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②	⑤	일부 중복
231	2009.12.	일부	행안위	온천법	3	②	⑥	중복 없음
232	2009.12.	전부	행안위	전자정부법	2	②	⑥	중복 없음
233	2009.12.	일부	행안위	접경지원지원법	2	①		중복 없음
234	2009.12.	일부	행안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4	①		일부 중복
235	2009.12.	일부	행안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법	2	②	⑥	중복 없음
236	2009.12.	일부	행안위	소방기본법	3	①		중복 없음
237	2009.12.	일부	행안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238	2009.12.	일부	행안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 한 법률	3	①		일부 중복
239	2009.12.	일부	행안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3	①		중복 없음
240	2009.12.	일부	정무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5	②	⑤	일부 중복
241	2009.12.	일부	정무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	①		일부 중복
242	2009.12.	일부	보가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	②	⑤	일부 중복
243	2009.12.	일부	보가위	의료법	3	①		일부 중복
244	2009.12.	일부	보가위	노인복지법	2	①		중복 없음
245	2009.12.	전부	보가위	결핵예방법	4	②	⑤	일부 중복
246	2009.12.	제정	외통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2	①		전체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247	2009.12.	제정	외통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5	①		전체 중복
248	2009.12.	일부	농수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249	2009.12.	일부	농수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	②	⑤	일부 중복
250	2009.12.	일부	지경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8	②	⑥	일부 중복
251	2009.12.	일부	지경위	집단에너지사업법	4	②	⑥	일부 중복
252	2009.12.	일부	지경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②	⑥	중복 없음
253	2009.12.	일부	기재위	주세법	4	②	⑤	일부 중복
254	2009.12.	일부	문방위	국민체육진흥법	2	①		전체 중복
255	2009.12.	일부	문방위	스포츠산업 진흥법	2	①		일부 중복
256	2009.12.	제정	문방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 사에 관한 법률	2	②	⑤	일부 중복
257	2009.12.	전부	문방위	문화재보호법	12	②	⑥	일부 중복
258	2009.12.	제정	문방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3	②	⑥	일부 중복
259	2009.12.	일부	환노위	악취방지법	3	②	⑥	일부 중복
260	2009.12.	일부	환노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261	2009.12.	일부	환노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①		중복 없음
262	2009.12.	일부	환노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263	2009.12.	일부	환노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②	⑥	전체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중복
264	2009.12.	일부	교과위	과학기술기본법	2	②	⑥	중복 없음
265	2009.12.	일부	행안위	공무원연금법	9	②	⑤	일부 중복
266	2009.12.	일부	기재위	법인세법	6	②	⑥	일부 중복
267	2009.12.	일부	교과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	②	⑤	일부 중복
268	2009.12.	일부	기재위	소득세법	10	②	⑥	일부 중복
269	2009.12.	일부	정개 특위	선거관리위원회법	1	①		
270	2009.12.	일부	보가위	의료기기법	1	①		
271	2009.12.	일부	보가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①		
272	2009.12.	일부	교과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	②	⑤	일부 중복
273	2009.12.	일부	교과위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2	③		중복 없음
274	2009.12.	일부	교과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 치법	2	③		중복 없음
275	2009.12.	일부	교과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2	③		중복 없음
276	2009.12.	일부	교과위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②	⑤	일부 중복
277	2009.12.	일부	교과위	학교급식법	2	②	⑤	일부 중복
278	2009.12.	일부	교과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2	③		중복 없음
279	2009.12.	일부	기재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③		중복 없음
280	2009.12.	일부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42	②	⑥	일부 중복
281	2009.12.	일부	기재위	부가가치세법	5	②	⑤	일부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282	2009.12.	일부	기재위	개별소비세법	2	③		중복 없음
283	2009.12.	일부	기재위	국세징수법	5	②	⑥	일부 중복
284	2009.12.	일부	기재위	국세기본법	9	②	⑤	일부 중복
285	2009.12.	일부	행안위	지방세법	4	②	④	일부 중복
286	2009.12.	전부	기재위	조세범처벌법	6	②	④	일부 중복
287	2009.12.	일부	기재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	②	⑤	일부 중복
288	2010.1.	일부	기재위	인지세법	3	②	⑥	중복 없음
289	2010.1.	일부	환노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	4	①		일부 중복
290	2010.1.	일부	기재위	관세법	4	②	⑥	중복 없음
291	2010.1.	일부	행안위	지방교부세법	3	②	④	일부 중복
292	2010.1.	일부	기재위	조세범 처벌절차법	2	②	⑥	일부 중복
293	2010.1.	일부	교과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1	②	⑥	일부 중복
294	2010.1.	일부	교과위	고등교육법	5	①		일부 중복
295	2010.2.	일부	교과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5	②	⑥	일부 중복
296	2010.2.	전부	정무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3	①		일부 중복
297	2010.2.	일부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6	①		중복 없음
298	2010.2.	일부	정무위	여신전문금융업법	15	①		일부 중복
299	2010.2.	일부	보가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①		일부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중복
300	2010.2.	일부	농수위	농약관리법	6	①		일부 중복
301	2010.2.	일부	농수위	초지법	2	①		중복 없음
302	2010.2.	일부	농수위	가축전염병예방법	2	②	⑤	일부 중복
303	2010.2.	일부	법사위	부정수표 단속법	2	②	⑥	중복 없음
304	2010.2.	일부	법사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 별법	2	①		중복 없음
305	2010.2.	일부	법사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2	②	⑤	일부 중복
306	2010.2.	일부	행안위	국가공무원법	2	③		중복 없음
307	2010.2.	일부	행안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	①		일부 중복
308	2010.2.	일부	행안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6	①		중복 없음
309	2010.2.	일부	국토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2	②	⑤	일부 중복
310	2010.2.	일부	국토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311	2010.2.	일부	국토위	선박안전법	2	②	⑤	전체 중복
312	2010.2.	일부	교과위	유아교육법	3	③		중복 없음
313	2010.2.	제정	국토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6	②	⑥	일부 중복
314	2010.2.	일부	지경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	②	⑤	일부 중복
315	2010.2.	일부	지경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316	2010.2.	제정	국토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3	②	④	일부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중복
317	2010.2.	일부	지경위	외국인투자 촉진법	3	②	⑤	전체 중복
318	2010.2.	일부	지경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 률	2	①		중복 없음
319	2010.2.	일부	지경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6	②	⑥	중복 없음
320	2010.2.	일부	지경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 법	2	①		중복 없음
321	2010.2.	일부	지원 특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 원특별법	3	①		중복 없음
322	2010.2.	일부	환노위	먹는물관리법	3	②	⑥	일부 중복
323	2010.2.	제정	환노위	석면피해구제법	4	①		일부 중복
324	2010.2.	제정	문방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	②	⑥	일부 중복
325	2010.2.	전부	문방위	전기통신사업법	3	②	⑥	일부 중복
326	2010.2.	일부	국토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2	①		전체 중복
327	2010.2.	일부	국토위	항공법	3	②	⑥	중복 없음
328	2010.2.	일부	국토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	①		일부 중복
329	2010.2.	전부	정무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4	②	④	일부 중복
330	2010.2.	일부	정무위	상호저축은행법	9	②	⑥	일부 중복
331	2010.2.	일부	정무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3	①		일부 중복
332	2010.2.	제정	법사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	②	⑤	전체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333	2010.2.	제정	행안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6	①		일부 중복
334	2010.2.	일부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2	①		중복 없음
335	2010.2.	일부	지경위	한국전력공사법	2	①		전체 중복
336	2010.2.	일부	지경위	대외무역법	2	②	⑥	중복 없음
337	2010.2.	제정	국토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①		전체 중복
338	2010.2.	일부	국토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4	①		전체 중복
339	2010.2.	일부	국토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①		일부 중복
340	2010.2.	일부	국토위	부동산투자회사법	3	①		중복 없음
341	2010.2.	일부	국토위	주택법	8	①		중복 없음
342	2010.2.	일부	외통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	②	⑥	중복 없음
343	2010.2.	일부	농수위	수산업협동조합법	6	②	⑥	중복 없음
344	2010.2.	일부	기재위	통계법	2	①		중복 없음
345	2010.3.	일부	국방위	군인사법	2	①		중복 없음
346	2010.3.	일부	국방위	방위사업법	3	①		중복 없음
347	2010.3.	일부	국토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①		일부 중복
348	2010.3.	일부	국토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	①		중복 없음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349	2010.3.	일부	외통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 한 법률	4	②	⑥	일부 중복
350	2010.3.	제정	외통위	6·25전쟁 남북피해 진 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	①		전체 중복
351	2010.3.	일부	법사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 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 착 등에 관한 법률	3	②	⑤	일부 중복
352	2010.3.	제정	법사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7	②	⑥	일부 중복
353	2010.3.	일부	법사위	형법	5	①		일부 중복
354	2010.3.	제정	보건위	장애인연금법	3	②	⑥	일부 중복
355	2010.3.	일부	법사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9	①		일부 중복
356	2010.4.	일부	법사위	사범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위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357	2010.4.	일부	법사위	헌법재판소법	2	①		중복 없음
358	2010.4.	전부	법사위	범죄피해자 보호법	8	②	⑥	일부 중복
359	2010.4.	일부	법사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360	2010.4.	일부	보건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5	②	⑤	일부 중복
361	2010.4.	일부	기재위	국가재정법	4	①		일부 중복
362	2010.4.	일부	행안위	지방세법	13	②	⑥	중복 없음
363	2010.4.	일부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9	①		일부 중복
364	2010.4.	일부	행안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365	2010.4.	일부	지경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	②	⑥	중복 없음
366	2010.4.	일부	행안위	정부조직법	2	②	⑤	전체 중복
367	2010.4.	일부	지경위	발명진흥법	2	①		중복 없음
368	2010.4.	일부	지경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②	⑤	일부 중복
369	2010.4.	일부	지경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	2	②	⑥	중복 없음
370	2010.4.	일부	지경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	①		중복 없음
371	2010.4.	일부	농수위	축산물위생관리법	4	②	⑤	일부 중복
372	2010.4.	일부	농수위	내수면어업법	2	②	⑤	일부 중복
373	2010.4.	일부	환노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2	②	⑥	중복 없음
374	2010.4.	전부	농수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에 관한 법률	2	①		일부 중복
375	2010.4.	일부	농수위	종자산업법	3	②	⑥	일부 중복
376	2010.4.	일부	농수위	산지관리법	4	②	⑤	일부 중복
377	2010.4.	일부	보건위	약사법	6	①		전체 중복
378	2010.4.	일부	환노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②	⑥	중복 없음
379	2010.4.	일부	보건위	의료법	6	①		전체 중복
380	2010.4.	일부	환노위	수도법	8	②	⑥	일부 중복
381	2010.4.	전부	보건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6	①		중복 없음
382	2010.4.	전부	보건위	암관리법	8	①		일부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383	2010.4.	일부	보건위	의료기기법	3	①		전체 중복
384	2010.4.	일부	여가위	청소년기본법	2	①		중복 없음
385	2010.4.	일부	보건위	국민건강증진법	3	①		일부 중복
386	2010.4.	일부	여가위	한부모가족지원법	2	②	⑤	일부 중복
387	2010.4.	일부	여가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 한 법률	7	①		일부 중복
388	2010.4.	일부	여가위	청소년활동 진흥법	2	①		중복 없음
389	2010.4.	일부	정무위	은행법	8	②	⑥	일부 중복
390	2010.4.	일부	환노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4	②	⑥	일부 중복
391	2010.6.	일부	문방위	전파법	4	②	⑥	일부 중복
392	2010.6.	일부	농수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 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2	②	⑥	중복 없음
393	2010.6.	일부	국토위	건축사법	3	①		일부 중복
394	2010.6.	일부	행안위	자연재해대책법	2	①		일부 중복
395	2010.6.	일부	행안위	소방시설관리법	2	③		중복 없음
396	2010.6.	일부	행안위	도로교통법	23	②	⑥	일부 중복
397	2010.6.	일부	법사위	민사집행법	2	①		중복 없음
398	2010.6.	일부	환노위	폐기물관리법	7	②	⑥	일부 중복
399	2010.6.	일부	환노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 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	②	⑤	전체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400	2010.6.	일부	보건위	의료법	2	①		전체 중복
401	2010.9.	제정	행안위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 한 특별법	8	①		전체 중복
402	2010.11.	일부	지경위	유통산업발전법	21	①		일부 중복
403	2010.11.	일부	지경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	①		일부 중복
404	2010.12.	일부	국토위	임대주택법	2	①		중복 없음
405	2010.12.	일부	행안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 성법	2	②	⑥	중복 없음
406	2010.12.	제정	행안위	서해5도 지원 특별법	4	①		전체 중복
407	2010.12.	제정	행안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 에 관한 특별법	4	①		전체 중복
408	2010.12.	전부	행안위	행정사법	2	②	⑤	일부 중복
409	2010.12.	일부	행안위	새마을금고법	3	②	⑥	일부 중복
410	2010.12.	일부	행안위	지방세기본법	3	②	⑤	일부 중복
411	2010.12.	일부	행안위	지방세법	4	②	⑥	중복 없음
412	2010.12.	일부	행안위	지방세특례제한법	5	②	⑥	일부 중복
413	2010.12.	일부	행안위	소방기본법	2	①		중복 없음
414	2010.12.	일부	행안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	①		중복 없음
415	2010.12.	일부	기재위	법인세법	8	①		일부 중복
416	2010.12.	일부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13	①		일부 중복
417	2010.12.	일부	기재위	교육세법	2	①		중복 없음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418	2010.12.	일부	기재위	소득세법	8	①		일부 중복
419	2010.12.	일부	기재위	부가가치세법	4	②	⑥	일부 중복
420	2010.12.	일부	기재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421	2010.12.	일부	기재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②	⑥	중복 없음
422	2010.12.	일부	기재위	관세법	2	②	⑥	중복 없음
423	2010.12.	일부	환노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5	②	⑥	중복 없음
424	2010.12.	일부	행안위	공무원연금법	2	①		중복 없음
425	2010.12.	일부	행안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2	②	⑤	일부 중복
426	2010.12.	일부	행안위	지방재정법	18	②	⑥	일부 중복
427	2010.12.	일부	행안위	지방교부세법	4	①		일부 중복
428	2010.12.	제정	농수위	말산업 육성법안	2	①		전체 중복
429	2010.12.	일부	농수위	한국마사회법	2	①		중복 없음
430	2010.12.	제정	농수위	낙시 관리 및 육성법	2	②	⑥	중복 없음
431	2010.12.	일부	농수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2	①		중복 없음
432	2010.12.	일부	농수위	친환경농업육성법	2	②	⑥	전체 중복
433	2010.12.	제정	농수위	외식산업 진흥법	2	①		전체 중복
434	2010.12.	일부	농수위	농어업재해대책법	5	①		일부 중복
435	2010.12.	일부	법사위	민법	6	②	⑥	전체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436	2011.1.	일부	농수위	가축전염병예방법	12	①		전체 중복
437	2011.2.	전부	교과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	②	⑤	일부 중복
438	2011.2.	일부	교과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	②	⑤	일부 중복
439	2011.3.	일부	농수위	산림조합법	2	①		중복 없음
440	2011.3.	일부	환노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441	2011.3.	일부	환노위	토양환경보전법	4	②	⑥	중복 없음
442	2011.3.	일부	환노위	하수도법	9	②	⑥	일부 중복
443	2011.3.	전부	보건위	의료기기법	3	②	⑤	일부 중복
444	2011.3.	제정	정무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	①		전체 중복
445	2011.3.	일부	지경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4	②	⑥	일부 중복
446	2011.3.	일부	지경위	전기사업법	3	②	⑤	일부 중복
447	2011.3.	일부	지경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448	2011.3.	일부	지경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7	②	⑥	일부 중복
449	2011.3.	일부	지경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2	②	⑥	중복 없음
450	2011.3.	일부	지경위	계량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451	2011.3.	일부	지경위	대한무역투자공사진흥법	2	②	⑥	중복 없음
452	2011.3.	일부	지경위	도시가스사업법	2	①		중복 없음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453	2011.3.	일부	문방위	관광진흥법	5	②	⑥	중복 없음
454	2011.3.	일부	문방위	국민체육진흥법	2	①		중복 없음
455	2011.3.	일부	문방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	②	⑤	일부 중복
456	2011.3.	일부	문방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4	①		일부 중복
457	2011.3.	일부	문방위	문화재보호법	1	①		
458	2011.3.	일부	국토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459	2011.3.	일부	보건위	기초노령연금법	2	①		중복 없음
460	2011.3.	일부	국토위	주택법	2	①		중복 없음
461	2011.3.	일부	문방위	도서관법	2	①		일부 중복
462	2011.3.	일부	보건위	약사법	1	①		
463	2011.3.	일부	보건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①		중복 없음
464	2011.3.	일부	정무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①		전체 중복
465	2011.3.	일부	문방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①		중복 없음
466	2011.3.	제정	보건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6	①		일부 중복
467	2011.3.	일부	환노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 한 법률	2	①		일부 중복
468	2011.3.	일부	농수위	농업협동조합법	7	②	⑤	전체 중복
469	2011.3.	일부	농수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류촉진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470	2011.3.	제정	행안위	개인정보 보호법	13	②	⑥	일부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471	2011.3.	제정	보건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 한 법률	2	①		전체 중복
472	2011.3.	제정	보건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 화 조성을 위한 법률	3	①		전체 중복
473	2011.3.	일부	보건위	의료법	2	①		중복 없음
474	2011.3.	일부	법사위	헌법재판소법	2	②	⑥	중복 없음
475	2011.3.	일부	법사위	상법	7	②	⑥	일부 중복
476	2011.3.	일부	법사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	②	⑥	중복 없음
477	2011.3.	일부	행안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9	②	⑥	일부 중복
478	2011.3.	일부	정무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①		중복 없음
479	2011.3.	일부	법사위	민사집행법	3	①		전체 중복
480	2011.3.	일부	법사위	공탁법	2	②	⑥	중복 없음
481	2011.3.	일부	여가위	한부모가족지원법	10	②	⑥	중복 없음
482	2011.3.	일부	여가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4	①		일부 중복
483	2011.3.	일부	여가위	다문화가족지원법	12	①		일부 중복
484	2011.3.	일부	문방위	복권 및 복권기금법	6	②	⑥	일부 중복
485	2011.3.	일부	법사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 할구역에 관한 법률	4	②	⑥	일부 중복
486	2011.3.	일부	보건위	노인복지법	11	②	⑥	일부 중복
487	2011.3.	일부	보건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	①		일부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488	2011.3.	일부	환노위	자연공원법	7	②	⑥	일부 중복
489	2011.3.	제정	정무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2	②	⑥	일부 중복
490	2011.3.	일부	정무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11	①		일부 중복
491	2011.3.	일부	지경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 구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492	2011.3.	일부	지경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①		중복 없음
493	2011.3.	일부	지경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5	②	⑥	일부 중복
494	2011.3.	일부	행안위	지방세기본법	3	①		일부 중복
495	2011.3.	일부	행안위	지방세법	3	①		일부 중복
496	2011.3.	일부	법사위	변호사법	2	①		일부 중복
497	2011.4.	일부	기재위	국세기본법	1	③		
498	2011.4.	일부	기재위	세무사법	1	③		
499	2011.4.	일부	기재위	소득세법	1	③		
500	2011.4.	일부	환노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	②	⑤	일부 중복
501	2011.4.	일부	환노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	①		중복 없음
502	2011.4.	제정	환노위	석면안전관리법	2	②	⑥	일부 중복
503	2011.4.	일부	보건위	의료법	4	①		일부 중복
504	2011.4.	일부	환노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	②	⑤	일부 중복
505	2011.4.	일부	외통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 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 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①		전체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506	2011.4.	일부	문방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	①		중복 없음
507	2011.4.	일부	문방위	공연법	2	②	⑤	일부 중복
508	2011.4.	일부	문방위	문화예술진흥법	8	②	⑥	일부 중복
509	2011.4.	일부	문방위	전기통신사업법	3	①		일부 중복
510	2011.4.	일부	법사위	민법	3	②	⑥	일부 중복
511	2011.4.	일부	국방위	병역법	4	②	⑥	일부 중복
512	2011.4.	일부	국방위	군인복지기금법	2	②	⑥	중복 없음
513	2011.4.	일부	국방위	군인연금법	3	①		일부 중복
514	2011.4.	일부	국방위	군인사법	4	②	⑥	일부 중복
515	2011.4.	일부	여가위	청소년보호법	3	①		일부 중복
516	2011.4.	일부	교과위	고등교육법	3	①		일부 중복
517	2011.4.	일부	교과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3	①		일부 중복
518	2011.4.	일부	교과위	우주개발 진흥법	2	②	⑥	중복 없음
519	2011.4.	일부	교과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4	②	⑥	중복 없음
520	2011.4.	일부	교과위	교육공무원법	3	①		중복 없음
521	2011.4.	일부	교과위	대한민국학술원법	2	②	⑥	중복 없음
522	2011.4.	일부	교과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 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2	②	⑥	중복 없음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523	2011.4.	일부	교과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524	2011.4.	전부	법사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	②	⑤	일부 중복
525	2011.4.	일부	국토위	건설산업기본법	5	②	⑥	일부 중복
526	2011.4.	일부	국토위	지하수법	5	②	⑤	일부 중복
527	2011.4.	일부	국토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2	②	⑥	중복 없음
528	2011.4.	일부	국토위	건축사법	3	②	⑥	일부 중복
529	2011.4.	일부	행안위	국가공무원법	8	②	⑥	일부 중복
530	2011.4.	일부	국토위	교통안전법	2	②	⑥	중복 없음
531	2011.4.	일부	행안위	지방공무원법	7	②	⑥	일부 중복
532	2011.4.	일부	국토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6	②	⑥	일부 중복
533	2011.4.	일부	국토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534	2011.4.	일부	국토위	건축법	2	②	⑤	일부 중복
535	2011.4.	일부	행안위	주민등록법	2	①		중복 없음
536	2011.4.	일부	행안위	지방자치법	3	①		일부 중복
537	2011.4.	일부	행안위	지진재해대책법	2	①		중복 없음
538	2011.4.	일부	행안위	유실물법	3	②	⑥	중복 없음
539	2011.4.	일부	행안위	소방기본법	3	②	⑥	일부 중복
540	2011.4.	일부	행안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2	②	⑥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법률				없음
541	2011.4.	일부	지경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 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2	②	⑥	중복 없음
542	2011.4.	일부	행안위	경찰대학 설치법	3	②	⑥	일부 중복
543	2011.4.	일부	행안위	경찰공무원법	3	②	⑥	중복 없음
544	2011.4.	일부	행안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2	②	⑥	중복 없음
545	2011.4.	일부	행안위	전투경찰대 설치법	4	②	⑥	중복 없음
546	2011.4.	일부	행안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 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4	②	⑤	일부 중복
547	2011.4.	일부	보건위	국민건강증진법	12	②	⑥	일부 중복
548	2011.4.	제정	보건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 립지원에 관한 법률	4	①		일부 중복
549	2011.4.	일부	보건위	약사법	7	②	⑥	일부 중복
550	2011.4.	일부	보건위	식품위생법	36	①		일부 중복
551	2011.4.	일부	보건위	노인복지법	6	②	⑥	일부 중복
552	2011.4.	일부	보건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7	①		일부 중복
553	2011.4.	일부	보건위	국민연금법	6	①		중복 없음
554	2011.4.	일부	보건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0	②	⑥	일부 중복
555	2011.4.	일부	보건위	영유아보육법	10	②	⑥	일부 중복
556	2011.4.	일부	지경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3	②	⑥	중복 없음
557	2011.4.	일부	지경위	별정우체국법	2	②	⑤	일부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558	2011.4.	일부	지경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	2	②	⑤	일부 중복
559	2011.4.	일부	운영위	국회법	7	①		일부 중복
560	2011.4.	일부	운영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2	①		일부 중복
561	2011.4.	일부	사개 특위	변호사법	7	①		일부 중복
562	2011.4.	일부	정무위	공사채 등록법	2	②	⑤	일부 중복
563	2011.4.	일부	정무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2	②	⑥	중복 없음
564	2011.4.	일부	정무위	신용보증기금법	2	②	⑥	중복 없음
565	2011.4.	제정	정무위	지식재산 기본법	3	②	⑥	일부 중복
566	2011.4.	일부	정무위	소비자기본법	4	②	⑥	중복 없음
567	2011.4.	일부	국토위	수상레저안전법	4	①		일부 중복
568	2011.4.	일부	정무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	①		중복 없음
569	2011.4.	일부	정무위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3	②	⑥	일부 중복
570	2011.4.	일부	정무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3	①		중복 없음
571	2011.4.	일부	정무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 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572	2011.4.	일부	국토위	해양환경관리법	3	②	⑥	일부 중복
573	2011.4.	일부	국토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 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3	①		일부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574	2011.4.	일부	국토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②	⑥	중복 없음
575	2011.4.	일부	국토위	자동차관리법	10	②	⑥	일부 중복
576	2011.4.	일부	국토위	선박직원법	3	②	⑥	중복 없음
577	2011.4.	일부	국토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 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578	2011.4.	일부	국토위	신항만건설촉진법	3	②	⑤	일부 중복
579	2011.4.	일부	국토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	②	⑥	중복 없음
580	2011.4.	일부	국토위	철도사업법	3	②	⑥	중복 없음
581	2011.4.	일부	국토위	국토기본법	2	③		중복 없음
582	2011.4.	일부	국토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	①		중복 없음
583	2011.4.	일부	국토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①		일부 중복
584	2011.4.	일부	여가위	청소년기본법	3	①		중복 없음
585	2011.4.	일부	국토위	도로교통법	23	②	⑥	일부 중복
586	2011.4.	전부	행안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6	②	⑥	일부 중복
587	2011.4.	일부	행안위	온천법	2	②	⑥	중복 없음
588	2011.4.	전부	행안위	국가장법	4	②	⑥	일부 중복
589	2011.4.	일부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4	②	⑥	일부 중복
590	2011.6.	일부	문방위	문화재보호법	4	①		중복 없음
591	2011.6.	일부	문방위	방송법	5	①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없음
592	2011.6.	제정	문방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2	①		전체 중복
593	2011.6.	일부	농수위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2	②	⑥	중복 없음
594	2011.6.	일부	농수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3	②	⑥	중복 없음
595	2011.6.	일부	농수위	식생활교육지원법	2	①		중복 없음
596	2011.6.	일부	농수위	어촌·어항법	2	②	⑥	중복 없음
597	2011.6.	일부	농수위	농업기계화촉진법	2	①		중복 없음
598	2011.6.	일부	농수위	농어업재해대책법	4	①		일부 중복
599	2011.6.	일부	농수위	수산생물질병관리법	3	②	⑤	일부 중복
600	2011.6.	일부	농수위	비료관리법	3	②	⑥	일부 중복
601	2011.6.	일부	농수위	수산업협동조합법	2	①		중복 없음
602	2011.6.	전부	농수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	②	⑥	일부 중복
603	2011.6.	일부	국방위	국군조직법	2	①		전체 중복
604	2011.6.	일부	국방위	군수품관리법	3	②	⑥	일부 중복
605	2011.6.	일부	국방위	군인사법	2	①		전체 중복
606	2011.6.	일부	정무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 립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607	2011.6.	일부	정무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608	2011.6.	일부	행안위	지방자치법	24	①		일부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609	2011.6.	일부	지경위	유통산업발전법	3	①		전체 중복
610	2011.6.	일부	지경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	2	③		중복 없음
611	2011.6.	일부	문방위	저작권법	2	②	⑥	중복 없음
612	2011.6.	일부	교과위	고등교육법	3	②	⑥	일부 중복
613	2011.6.	전부	외통위	환경정책기본법	3	②	⑤	일부 중복
614	2011.6.	전부	기재위	환경영향평가법	3	②	⑥	일부 중복
615	2011.6.	일부	교과위	교육공무원법	5	①		중복 없음
616	2011.6.	일부	외통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3	①		일부 중복
617	2011.6.	일부	기재위	국유재산법	2	①		일부 중복
618	2011.6.	일부	기재위	세무사법	1	③		
619	2011.6.	일부	교과위	교육공무원법	4	①		전체 중복
620	2011.6.	일부	외통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	①		일부 중복
621	2011.6.	전부	교과위	원자력 진흥법	5	①		일부 중복
622	2011.6.	제정	외통위	국립외교원법	3	①		일부 중복
623	2011.6.	일부	교과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 법률	11	②	⑥	일부 중복
624	2011.6.	일부	교과위	초·중등교육법	4	①		전체 중복
625	2011.6.	일부	교과위	유아교육법	2	①		전체 중복
626	2011.6.	일부	보건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①		일부 중복
627	2011.6.	일부	교과위	사립학교법	3	①		전체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중복
628	2011.6.	일부	보건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3	②	⑤	일부 중복
629	2011.6.	제정	보건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 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	②	⑥	일부 중복
630	2011.6.	일부	외통위	외무공무원법	2	③		중복 없음
631	2011.6.	일부	보건위	사회복지사업법	6	②	⑥	일부 중복
632	2011.6.	제정	교과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①		전체 중복
633	2011.6.	전부	보건위	아동복지법	7	①		일부 중복
634	2011.6.	일부	교과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2	②	⑤	전체 중복
635	2011.6.	일부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636	2011.6.	일부	문방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 사에 관한 법률	5	①		일부 중복
637	2011.6.	일부	문방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 한 특별법	5	②	⑥	일부 중복
638	2011.6.	전부	보건위	입양특례법	4	②	⑥	일부 중복
639	2011.6.	일부	보건위	영유아보육법	5	②	⑥	중복 없음
640	2011.6.	일부	국토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5	②	⑥	중복 없음
641	2011.6.	일부	보건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5	②	⑥	일부 중복
642	2011.6.	일부	보건위	의료법	7	①		일부 중복
643	2011.6.	일부	보건위	한의약육성법	2	①		중복 없음
644	2011.6.	일부	지경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	①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없음
645	2011.6.	전부	국토위	선원법	2	②	⑤	일부 중복
646	2011.6.	일부	지경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6	②	⑥	일부 중복
647	2011.6.	일부	국토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648	2011.6.	일부	국토위	골재채취법	4	②	⑥	일부 중복
649	2011.6.	일부	지경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7	①		중복 없음
650	2011.6.	일부	지경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651	2011.6.	일부	지경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①		일부 중복
652	2011.6.	일부	지경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4	②	⑥	일부 중복
653	2011.6.	제정	교과위	원자력안전법	3	①		일부 중복
654	2011.6.	일부	농수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2	①		중복 없음
655	2011.6.	전부	보건위	화장품법	16	②	⑥	일부 중복
656	2011.6.	일부	농수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657	2011.6.	일부	보건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 구매 특별법	2	②	⑥	중복 없음
658	2011.6.	일부	농수위	가축전염병예방법	8	①		일부 중복
659	2011.6.	일부	농수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3	①		중복 없음
660	2011.6.	전부	농수위	동물보호법	11	②	⑥	일부 중복
661	2011.6.	일부	농수위	수의사법	2	①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없음
662	2011.6.	일부	보건위	식품위생법	6	①		중복 없음
663	2011.6.	일부	농수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 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664	2011.6.	일부	농수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에 관한 법률	4	①		중복 없음
665	2011.6.	일부	농수위	농약관리법	2	②	⑥	일부 중복
666	2011.6.	일부	농수위	농어업재해보험법	2	①		중복 없음
667	2011.6.	일부	보건위	식품안전기본법	2	①		중복 없음
668	2011.6.	일부	보건위	장애인복지법	2	①		중복 없음
669	2011.6.	전부	농수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 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 에 관한 특별법	12	②	⑥	일부 중복
670	2011.6.	일부	지경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	①		전체 중복
671	2011.6.	일부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5	①		일부 중복
672	2011.6.	일부	기재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	5	②	⑥	중복 없음
673	2011.6.	일부	정무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3	②	⑥	중복 없음
674	2011.6.	일부	법사위	변호사시험법	2	①		중복 없음
675	2011.6.	일부	법사위	이자제한법	4	①		전체 중복
676	2011.6.	일부	법사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별법	2	①		전체 중복
677	2011.6.	일부	기재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5	②	⑥	중복 없음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678	2011.6.	일부	법사위	민사소송 등 인지법	1	①		
679	2011.6.	일부	행안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2	②	⑥	중복 없음
680	2011.6.	일부	행안위	도로명주소법	2	②	⑥	중복 없음
681	2011.6.	일부	행안위	상훈법	3	②	⑥	중복 없음
682	2011.6.	일부	농수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에 관한 특별법	3	②	⑥	일부 중복
683	2011.6.	일부	행안위	지방재정법	4	②	⑥	중복 없음
684	2011.6.	일부	행안위	지방공기업법	4	②	⑥	중복 없음
685	2011.6.	일부	행안위	공직자윤리법	17	①		일부 중복
686	2011.6.	일부	행안위	공무원연금법	7	②	⑥	일부 중복
687	2011.6.	일부	지경위	중소기업기본법	4	②	⑥	일부 중복
688	2011.6.	일부	문방위	지방문화원진흥법	3	①		일부 중복
689	2011.6.	일부	행안위	경찰공무원법	3	①		전체 중복
690	2011.6.	일부	행안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 별 특별법	5	②	⑥	일부 중복
691	2011.6.	일부	행안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7	②	⑥	일부 중복
692	2011.6.	일부	행안위	재해구호법	2	②	⑥	중복 없음
693	2011.6.	일부	행안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②	⑥	일부 중복
694	2011.6.	일부	행안위	소방공무원법	2	①		전체 중복
695	2011.6.	일부	국토위	임대주택법	3	①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없음
696	2011.6.	일부	환노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7	②	⑥	일부 중복
697	2011.6.	일부	환노위	자연환경보전법	3	①		중복 없음
698	2011.6.	일부	환노위	자연공원법	2	①		중복 없음
699	2011.6.	일부	환노위	수도법	3	②	⑤	일부 중복
700	2011.6.	전부	환노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②	⑥	일부 중복
701	2011.6.	일부	환노위	고용정책 기본법	6	①		일부 중복
702	2011.6.	일부	환노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2	①		중복 없음
703	2011.6.	일부	환노위	산업안전보건법	3	②	⑥	중복 없음
704	2011.6.	일부	환노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4	②	⑤	일부 중복
705	2011.6.	일부	환노위	고용보험법	3	②	⑤	일부 중복
706	2011.6.	일부	환노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3	②	⑥	중복 없음
707	2011.6.	일부	보건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6	②	⑥	일부 중복
708	2011.6.	전부	농수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①		일부 중복
709	2011.6.	전부	국방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2	②	⑤	일부 중복
710	2011.6.	일부	기재위	한국은행법	10	①		일부 중복
711	2011.8.	일부	지원 특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2014인천아시아경 기대회,2014인천장애인	2	①		중복 없음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 회 지원법				
712	2011.8.	일부	정무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②	⑥	중복 없음
713	2011.8.	일부	정무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714	2011.8.	일부	국토위	주택법	5	②	⑥	일부 중복
715	2011.8.	일부	국토위	건설기술관리법	3	②	⑥	중복 없음
716	2011.8.	일부	국토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717	2011.8.	제정	국토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	①		전체 중복
718	2011.8.	일부	국토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①		전체 중복
719	2011.8.	일부	국토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	②	⑥	중복 없음
720	2011.8.	일부	국토위	한국도로공사법	2	②	⑥	중복 없음
721	2011.8.	일부	국토위	건설기계관리법	3	②	⑥	중복 없음
722	2011.8.	일부	국토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	①		중복 없음
723	2011.8.	일부	교과위	고등교육법	2	①		전체 중복
724	2011.8.	일부	국토위	건축법	2	①		중복 없음
725	2011.8.	전부	여가위	청소년 보호법	12	②	⑥	일부 중복
726	2011.8.	일부	여가위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0	①		일부 중복
727	2011.8.	일부	여가위	건강가정기본법	4	②	⑥	중복 없음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728	2011.9.	일부	교과위	교육공무원법	4	②	⑥	일부 중복
729	2011.9.	일부	교과위	초·중등교육법	3	②	⑥	전체 중복
730	2011.9.	일부	환노위	기상법	4	②	⑥	일부 중복
731	2011.9.	일부	정무위	금융중심지의 조성 과 발 전에 관한 법률	2	①		전체 중복
732	2011.9.	일부	국토위	도시개발법	3	②	⑥	일부 중복
733	2011.10.	일부	환노위	하수도법	2	③		중복 없음
734	2011.10.	일부	환노위	수도법	6	②	⑥	중복 없음
735	2011.10.	일부	지경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	①		중복 없음
736	2011.10.	일부	정무위	전자금융거래법	2	①		중복 없음
737	2011.10.	일부	정무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 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738	2011.10.	제정	정무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①		일부 중복
739	2011.10.	일부	보건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	②	⑥	중복 없음
740	2011.10.	일부	법사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9	①		전체 중복
741	2011.10.	제정	문방위	예술인 복지법	4	①		전체 중복
742	2011.10.	일부	농수위	축산물위생관리법	2	①		중복 없음
743	2011.10.	일부	농수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6	②	⑥	일부 중복
744	2011.10.	일부	정보위	국가정보원직원법	3	②	⑥	중복 없음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745	2011.11.	일부	환노위	환경분쟁 조정법	4	②	⑥	중복 없음
746	2011.11.	일부	국토위	주차장법	3	①		일부 중복
747	2011.12.	일부	농수위	가축전염병예방법	3	①		중복 없음
748	2011.12.	일부	농수위	환경보건법	2	②	⑤	일부 중복
749	2011.12.	일부	농수위	대기환경보전법	3	②	⑥	중복 없음
750	2011.12.	일부	농수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751	2011.12.	일부	농수위	수산업협동조합법	3	①		중복 없음
752	2011.12.	일부	농수위	농지법	5	②	⑥	일부 중복
753	2011.12.	일부	환노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6	②	⑥	일부 중복
754	2011.12.	일부	농수위	산림조합법	3	①		중복 없음
755	2011.12.	일부	환노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②	⑥	일부 중복
756	2011.12.	일부	국토위	항만법	3	②	⑥	중복 없음
757	2011.12.	일부	농수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4	②	⑥	일부 중복
758	2011.12.	일부	국토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2	②	⑥	중복 없음
759	2011.12.	일부	국토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0	②	⑥	일부 중복
760	2011.12.	일부	국토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3	①		일부 중복
761	2011.12.	일부	국토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	②	⑥	일부 중복
762	2011.12.	일부	농수위	축산법	3	②	⑥	일부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763	2011.12.	일부	국토위	주택법	6	②	⑥	일부 중복
764	2011.12.	일부	농수위	수의사법	2	①		중복 없음
765	2011.12.	일부	지경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4	②	⑥	일부 중복
766	2011.12.	일부	행안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 에 관한 특별법	3	①		중복 없음
767	2011.12.	일부	정무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768	2011.12.	일부	정무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769	2011.12.	전부	정무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	②	⑥	일부 중복
770	2011.12.	일부	정무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4	①		중복 없음
771	2011.12.	일부	국방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772	2011.12.	일부	정무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7	②	⑥	일부 중복
773	2011.12.	일부	문방위	콘텐츠산업 진흥법	3	①		중복 없음
774	2011.12.	일부	문방위	문화재보호법	3	①		일부 중복
775	2011.12.	일부	지경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 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5	①		일부 중복
776	2011.12.	일부	문방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2	①		일부 중복
777	2011.12.	일부	문방위	문화예술진흥법	3	①		중복 없음
778	2011.12.	제정	문방위	작은도서관 진흥법	2	①		전체 중복
779	2011.12.	일부	문방위	도서관법	3	①		중복 없음
780	2011.12.	일부	문방위	방송법	4	①		일부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중복
781	2011.12.	일부	지원 특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2013충주세계조정 선수권대회,2014인천아 시아경기대회, 2014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 드대회지원법	4	②	⑥	중복 없음
782	2011.12.	일부	국토위	골재채취법	4	②	⑥	중복 없음
783	2011.12.	일부	보건위	사회복지사업법	6	①		일부 중복
784	2011.12.	일부	보건위	영유아보육법	5	①		중복 없음
785	2011.12.	일부	보건위	국민연금법	6	②	⑥	일부 중복
786	2011.12.	전부	보건위	국민건강보험법	8	②	⑥	일부 중복
787	2011.12.	일부	문방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①		일부 중복
788	2011.12.	제정	지원 특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 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 별법	3	①		전체 중복
789	2011.12.	제정	기재위	협동조합 기본법	2	①		일부 중복
790	2011.12.	일부	기재위	세무사법	2	①		중복 없음
791	2011.12.	일부	행안위	경찰법	2	①		중복 없음
792	2011.12.	일부	보건위	노인복지법	4	①		일부 중복
793	2011.12.	전부	보건위	사회보장기본법	3	①		일부 중복
794	2011.12.	일부	기재위	조세법 처벌법	2	①		중복 없음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795	2011.12.	제정	외통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7	①		일부 중복
796	2011.12.	일부	여가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 한 법률	14	①		일부 중복
797	2011.12.	일부	보건위	국민건강증진법	2	①		일부 중복
798	2011.12.	일부	여가위	한부모가족지원법	2	②	⑥	중복 없음
799	2011.12.	일부	여가위	다문화가족지원법	3	①		중복 없음
800	2011.12.	제정	행안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3	①		일부 중복
801	2011.12.	일부	행안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3	②	⑥	중복 없음
802	2011.12.	일부	보건위	약사법	6	②	⑥	일부 중복
803	2011.12.	일부	보건위	의료법	7	①		일부 중복
804	2011.12.	일부	법사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4	①		중복 없음
805	2011.12.	일부	법사위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 률	2	①		전체 중복
806	2011.12.	일부	법사위	출입국관리법	5	②	⑥	중복 없음
807	2011.12.	일부	법사위	공증인법	2	②	⑥	중복 없음
808	2011.12.	일부	법사위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2	①		전체 중복
809	2011.12.	일부	법사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	2	①		중복 없음
810	2011.12.	일부	법사위	민법	4	②	⑥	일부 중복
811	2011.12.	일부	법사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 할구역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812	2011.12.	일부	법사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6	①		일부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관한 법률				중복
813	2011.12.	일부	지경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 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 한 법률	4	②	⑥	일부 중복
814	2011.12.	일부	법사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①		중복 없음
815	2011.12.	일부	법사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	②	⑥	일부 중복
816	2011.12.	일부	기재위	농어촌특별세법	2	②	⑥	중복 없음
817	2011.12.	일부	기재위	부가가치세법	7	②	⑥	일부 중복
818	2011.12.	일부	기재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②	⑥	일부 중복
819	2011.12.	일부	기재위	소득세법	6	②	⑥	일부 중복
820	2011.12.	일부	기재위	국세징수법	2	②	⑥	중복 없음
821	2011.12.	일부	기재위	법인세법	9	②	⑥	일부 중복
822	2011.12.	일부	기재위	개별소비세법	6	②	⑥	일부 중복
823	2011.12.	전부	국토위	수난구호법	3	①		일부 중복
824	2011.12.	일부	국토위	항공법	8	②	⑥	일부 중복
825	2011.12.	전부	기재위	조세범 처벌절차법	2	②	⑥	중복 없음
826	2011.12.	일부	기재위	국세기본법	5	②	⑥	일부 중복
827	2011.12.	일부	기재위	주세법	2	②	⑥	중복 없음
828	2011.12.	일부	기재위	관세법	5	②	⑥	일부 중복
829	2011.12.	일부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77	②	⑥	일부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830	2011.12.	일부	기재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4	②	⑥	일부 중복
831	2011.12.	일부	교과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	①		일부 중복
832	2011.12.	일부	교과위	초·중등교육법	6	①		중복 없음
833	2011.12.	일부	교과위	고등교육법	16	②	⑥	일부 중복
834	2011.12.	제정	행안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	②	⑥	일부 중복
835	2011.12.	일부	보건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②	⑥	중복 없음
836	2011.12.	일부	행안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2	②	⑥	중복 없음
837	2011.12.	일부	교과위	교육공무원법	6	①		일부 중복
838	2011.12.	일부	행안위	민방위기본법	9	②	⑥	일부 중복
839	2011.12.	일부	교과위	유아교육법	6	②	⑥	일부 중복
840	2011.12.	일부	보건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②	⑥	중복 없음
841	2011.12.	일부	행안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4	②	⑥	중복 없음
842	2011.12.	일부	교과위	사립학교법	6	②	⑥	중복 없음
843	2011.12.	전부	보건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844	2011.12.	제정	교과위	학교체육 진흥법	5	①		일부 중복
845	2011.12.	일부	행안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	①		중복 없음
846	2011.12.	일부	정무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3	①		중복 없음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847	2011.12.	일부	농수위	산지관리법	9	②	⑥	중복 없음
848	2011.12.	일부	정무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	②	⑥	중복 없음
849	2011.12.	일부	국토위	건설기계관리법	3	②	⑥	중복 없음
850	2011.12.	일부	행안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6	②	⑥	중복 없음
851	2011.12.	일부	정무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852	2011.12.	일부	국토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에 관한 특별법	2	①		중복 없음
853	2011.12.	일부	국토위	건설기술관리법	3	①		중복 없음
854	2011.12.	제정	국토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	①		일부 중복
855	2011.12.	일부	국토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에 관한 법률	7	②	⑥	일부 중복
856	2011.12.	일부	국토위	지하수법	3	①		중복 없음
857	2011.12.	일부	농수위	산림보호법	3	②	⑥	중복 없음
858	2011.12.	일부	국토위	도시개발법	2	①		중복 없음
859	2011.12.	제정	국토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6	①		일부 중복
860	2011.12.	일부	농수위	축산물위생관리법	3	②	⑥	중복 없음
861	2011.12.	일부	농수위	농어촌정비법	3	②	⑥	중복 없음
862	2011.12.	일부	농수위	자연재해대책법	6	②	⑥	중복 없음
863	2011.12.	전부	보건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 한 법률	4	②	⑥	일부 중복
864	2011.12.	일부	국토위	해사안전법	1	①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865	2011.12.	일부	국토위	건축법	2	①		중복 없음
866	2011.12.	일부	국토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867	2011.12.	일부	국토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 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2	②	⑥	중복 없음
868	2011.12.	일부	환노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 리법	5	②	⑥	중복 없음
869	2011.12.	일부	환노위	환경정책기본법	2	①		중복 없음
870	2011.12.	일부	환노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 에 관한 법률	2	①		일부 중복
871	2011.12.	일부	환노위	악취방지법	2	②	⑥	중복 없음
872	2011.12.	일부	보건위	장애인복지법	6	②	⑥	중복 없음
873	2011.12.	일부	보건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874	2011.12.	일부	문방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	②	⑥	중복 없음
875	2011.12.	일부	문방위	국민체육진흥법	7	②	⑥	일부 중복
876	2011.12.	일부	문방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	①		중복 없음
877	2011.12.	일부	문방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②	⑥	일부 중복
878	2011.12.	일부	문방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11	①		일부 중복
879	2011.12.	전부	여가위	청소년복지 지원법	3	②	⑤	일부 중복
880	2011.12.	일부	여가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881	2011.12.	일부	여가위	청소년기본법	3	①		일부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882	2011.12.	일부	여가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	①		일부 중복
883	2011.12.	제정	교과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	①		전체 중복
884	2011.12.	일부	행안위	지방세기본법	4	②	⑥	중복 없음
885	2011.12.	일부	행안위	지방세특례제한법	8	②	⑥	일부 중복
886	2011.12.	일부	행안위	지방세법	4	②	⑥	일부 중복
887	2011.12.	전부	지원 특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2	①		중복 없음
888	2011.12.	일부	지경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6	②	⑥	일부 중복
889	2011.12.	일부	지경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	②	⑥	일부 중복
890	2011.12.	일부	지경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 급 촉진법	2	①		중복 없음
891	2011.12.	일부	지경위	유통산업발전법	4	①		일부 중복
892	2011.12.	일부	교과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7	①		일부 중복
893	2011.12.	일부	교과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특별법	2	①		중복 없음
894	2011.12.	일부	행안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 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3	①		중복 없음
895	2011.12.	일부	국토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	②	⑥	일부 중복
896	2011.12.	일부	국토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6	①		일부 중복
897	2011.12.	일부	교과위	학교보건법	4	②	⑥	중복 없음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898	2011.12.	일부	교과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5	②	⑥	일부 중복
899	2012.2.	제정	문방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7	①		전체 중복
900	2012.2.	제정	법사위	20111026재보궐선거일중 양선거관리위원회와박원 순서울시장후보홈페이지 에대한 사이버테러진상 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 명등에관한법률	2	①		전체 중복
901	2012.2.	일부	기재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902	2012.2.	일부	기재위	한국은행법	7	①		일부 중복
903	2012.2.	일부	기재위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 조치에 관한 법률	2	①		전체 중복
904	2012.2.	일부	행안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905	2012.2.	일부	행안위	국가공무원법	2	①		중복 없음
906	2012.2.	일부	행안위	지방세특례제한법	2	①		중복 없음
907	2012.2.	일부	교과위	초·중등교육법	2	③		중복 없음
908	2012.2.	일부	행안위	상훈법	2	①		중복 없음
909	2012.2.	일부	행안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5	②	⑥	중복 없음
910	2012.2.	일부	운영위	국가인권위원회법	6	①		일부 중복
911	2012.2.	전부	행안위	경범죄 처벌법	6	②	⑥	일부 중복
912	2012.2.	일부	교과위	유아교육법	7	②	⑥	일부 중복
913	2012.2.	일부	교과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10	①		일부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관한 법률				중복
914	2012.2.	일부	행안위	도로교통법	5	①		일부 중복
915	2012.2.	일부	정무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2	②	⑥	중복 없음
916	2012.2.	일부	정무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	②	⑥	중복 없음
917	2012.2.	일부	정무위	여신전문금융업법	7	①		일부 중복
918	2012.2.	일부	정무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①		중복 없음
919	2012.2.	일부	정무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 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 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920	2012.2.	일부	행안위	지방공무원법	6	②	⑥	일부 중복
921	2012.5.	일부	환노위	먹는물관리법	3	①		중복 없음
922	2012.5.	일부	환노위	대기환경보전법	7	②	⑥	중복 없음
923	2012.5.	일부	농수위	농업협동조합법	2	①		중복 없음
924	2012.5.	전부	농수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 원에 관한 법률	3	②	⑥	일부 중복
925	2012.5.	일부	국토위	철도안전법	8	②	⑥	일부 중복
926	2012.5.	일부	국토위	건설산업기본법	2	②	⑥	중복 없음
927	2012.5.	일부	국토위	해운법	7	②	⑥	일부 중복
928	2012.5.	일부	국토위	도로법	8	①		중복 없음
929	2012.5.	일부	국토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	②	⑥	중복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없음
930	2012.5.	일부	국토위	해양환경관리법	5	②	⑥	중복 없음
931	2012.5.	일부	농수위	한국마사회법	2	①		중복 없음
932	2012.5.	일부	국토위	물류정책기본법	2	③		중복 없음
933	2012.5.	일부	보건위	모자보건법	2	①		중복 없음
934	2012.5.	일부	국토위	항만공사법	3	②	⑥	중복 없음
935	2012.5.	일부	국토위	교통안전법	2	②	⑥	중복 없음
936	2012.5.	일부	보건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937	2012.5.	제정	기후 특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	②	⑤	전체 중복
938	2012.5.	일부	국토위	자동차관리법	3	①		중복 없음
939	2012.5.	일부	국토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940	2012.5.	일부	보건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	①		일부 중복
941	2012.5.	일부	출산특 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9	①		일부 중복
942	2012.5.	일부	농수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4	②	⑥	중복 없음
943	2012.5.	일부	국토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3	①		중복 없음
944	2012.5.	일부	국토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법	9	②	⑥	일부 중복
945	2012.5.	일부	보건위	障碍人·老人·妊産婦 등의 便宜増進保障에 관한法律	2	①		중복 없음
946	2012.5.	일부	농수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3	①		전체

순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위원회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중복
947	2012.5.	일부	지경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5	②	⑥	일부 중복
948	2012.5.	일부	국토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	①		중복 없음
949	2012.5.	일부	문방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	6	①		일부 중복
950	2012.5.	일부	문방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	3	①		전체 중복

2. 제18대 국회 대안 중 분배정책에 해당하는 법률안

순 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1	2008.11.	일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	3	①		중복 없음
2	2008.12.	일부	조세특례제한법	37	②	⑥	일부 중복
3	2009.1.	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	①		일부 중복
4	2009.1.	일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②	⑤	전체 중복
5	2009.1.	일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 원 등에 관한 법률	3	②	④	일부 중복
6	2009.1.	일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3	①		전체 중복
7	2009.1.	일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②	⑤	일부 중복
8	2009.2.	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②	⑤	전체 중복

순 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9	2009.2.	일부	조세특례제한법	4	①		일부 중복
10	2009.2.	일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 한 특별법	3	①		중복 없음
11	2009.4.	일부	조세특례제한법	4	②	⑤	일부 중복
12	2009.11.	일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 에관한특별법	2	①		중복 없음
13	2009.12.	일부	청원경찰법	3	②	⑥	일부 중복
14	2009.12.	일부	접경지원지원법	2	①		중복 없음
15	2009.12.	일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②	⑥	중복 없음
16	2009.12.	일부	조세특례제한법	42	②	⑥	일부 중복
17	2010.2.	일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6	①		중복 없음
18	2010.2.	제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3	②	④	일부 중복
19	2010.2.	제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 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 한 특별법	6	①		일부 중복
20	2010.2.	일부	조세특례제한법	2	①		중복 없음
21	2010.2.	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	②	⑥	중복 없음
22	2010.3.	일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	4	②	⑥	일부

순 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한 법률				중복
23	2010.4.	일부	조세특례제한법	9	①		일부 중복
24	2010.4.	일부	한부모가족지원법	2	②	⑤	일부 중복
25	2010.12.	제정	서해5도 지원 특별법	4	①		전체 중복
26	2010.12.	일부	지방세특례제한법	5	②	⑥	일부 중복
27	2010.12.	일부	조세특례제한법	13	①		일부 중복
28	2011.3.	일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7	②	⑥	일부 중복
29	2011.3.	일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①		전체 중복
30	2011.3.	일부	한부모가족지원법	10	②	⑥	중복 없음
31	2011.3.	일부	다문화가족지원법	12	①		일부 중복
32	2011.4.	일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2	①		전체 중복
33	2011.4.	일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 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4	②	⑤	일부 중복
34	2011.4.	일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 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 원 등에 관한 특별법	3	①		일부 중복
35	2011.4.	전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6	②	⑥	일부

순 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중복
36	2011.4.	일부	조세특례제한법	4	②	⑥	일부 중복
37	2011.6.	전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 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 에 관한 특별법	12	②	⑥	일부 중복
38	2011.6.	일부	조세특례제한법	5	①		일부 중복
39	2011.6.	일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②	⑥	일부 중복
40	2011.8.	일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②	⑥	중복 없음
41	2011.12.	일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4	②	⑥	일부 중복
42	2011.12.	일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43	2011.12.	일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2	①		일부 중복
44	2011.12.	일부	한부모가족지원법	2	②	⑥	중복 없음
45	2011.12.	일부	다문화가족지원법	3	①		중복 없음
46	2011.12.	일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 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 한 법률	4	②	⑥	일부 중복
47	2011.12.	일부	조세특례제한법	77	②	⑥	일부 중복
48	2011.12.	일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4	②	⑥	중복 없음
49	2011.12.	일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	②	⑥	중복 없음

순 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50	2011.12.	일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①		중 복 없음
51	2011.12.	일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 복 없음
52	2011.12.	일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 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2	②	⑥	중 복 없음
53	2011.12.	일부	지방세특례제한법	8	②	⑥	일 부 중복
54	2012.2.	일부	지방세특례제한법	2	①		중 복 없음

3. 제18대 국회 대안 중 규제정책에 해당하는 법률안

순 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1	2008.12.	일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5	①		일부 중복
2	2009.3.	일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②	⑥	일부 중복
3	2009.4.	일부	대기환경보전법	2	①		중복 없음
4	2009.4.	일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	①		일부 중복
5	2009.11.	일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2	①		중복 없음
6	2009.11.	일부	자동차관리법	4	①		중복 없음
7	2009.11.	일부	해양환경관리법	2	②	⑥	중복 없음
8	2009.12.	일부	비료관리법	2	①		중복 없음

순 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9	2009.12.	일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8	②	⑥	일부 중복
10	2010.2.	일부	먹는물관리법	3	②	⑥	일부 중복
11	2010.2.	일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	①		일부 중복
12	2010.4.	일부	축산물위생관리법	4	②	⑤	일부 중복
13	2010.4.	일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2	②	⑥	중복 없음
14	2010.4.	전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에 관한 법률	2	①		일부 중복
15	2010.4.	전부	암관리법	8	①		일부 중복
16	2010.4.	일부	의료기기법	3	①		전체 중복
17	2010.4.	일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 한 법률	7	①		일부 중복
18	2010.6.	일부	폐기물관리법	7	②	⑥	일부 중복
19	2010.11.	일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	①		일부 중복
20	2010.12.	일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	①		중복 없음
21	2011.3.	일부	토양환경보전법	4	②	⑥	중복 없음
22	2011.3.	전부	의료기기법	3	②	⑤	일부 중복
23	2011.3.	일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9	②	⑥	일부 중복
24	2011.3.	일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3	①		중복

순 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를				없음
25	2011.4.	일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	①		중복 없음
26	2011.4.	제정	석면안전관리법	2	②	⑥	일부 중복
27	2011.4.	일부	지하수법	5	②	⑤	일부 중복
28	2011.4.	일부	해양환경관리법	3	②	⑥	일부 중복
29	2011.4.	일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②	⑥	중복 없음
30	2011.4.	일부	자동차관리법	10	②	⑥	일부 중복
31	2011.6.	일부	비료관리법	3	②	⑥	일부 중복
32	2011.6.	일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	2	③		중복 없음
33	2011.6.	전부	환경정책기본법	3	②	⑤	일부 중복
34	2011.6.	전부	환경영향평가법	3	②	⑥	일부 중복
35	2011.6.	전부	동물보호법	11	②	⑥	일부 중복
36	2011.6.	일부	이자제한법	4	①		전체 중복
37	2011.6.	일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 벌 특별법	5	②	⑥	일부 중복
38	2011.6.	일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7	②	⑥	일부 중복
39	2011.6.	일부	자연환경보전법	3	①		중복 없음
40	2011.6.	전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2	①		일부

순 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복
41	2011.8.	일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	②	⑥	중복 없음
42	2011.8.	일부	건설기계관리법	3	②	⑥	중복 없음
43	2011.10.	일부	축산물위생관리법	2	①		중복 없음
44	2011.12.	일부	대기환경보전법	3	②	⑥	중복 없음
45	2011.12.	일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6	②	⑥	일부 중복
46	2011.12.	일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47	2011.12.	일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4	①		일부 중복
48	2011.12.	일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3	②	⑥	중복 없음
49	2011.12.	일부	지하수법	3	①		중복 없음
50	2011.12.	일부	축산물위생관리법	3	②	⑥	중복 없음
51	2011.12.	일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5	②	⑥	중복 없음
52	2011.12.	일부	환경정책기본법	2	①		중복 없음
53	2012.2.	일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①		중복 없음
54	2012.5.	일부	먹는물관리법	3	①		중복 없음
55	2012.5.	일부	대기환경보전법	7	②	⑥	중복 없음

순 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56	2012.5.	일부	해양환경관리법	5	②	⑥	중복 없음
57	2012.5.	일부	자동차관리법	3	①		중복 없음
58	2012.5.	일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	3	①		전체 중복

4. 제18대 국회 대안 중 재분배정책에 해당하는 법률안

순 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1	2008.12.	일부	종합부동산세법	9	②	⑤	일부 중복
2	2008.12.	일부	소득세법	11	②	⑤	일부 중복
3	2009.1.	일부	지방세법	4	①		전체 중복
4	2009.4.	일부	지방세법	2	②	⑥	중복 없음
5	2009.4.	일부	긴급복지지원법	4	②	⑤	일부 중복
6	2009.4.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2	①		중복 없음
7	2009.4.	일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3	②	⑥	일부 중복
8	2009.4.	일부	소득세법	5	②	⑥	중복 없음
9	2009.12.	일부	노인복지법	2	①		중복 없음
10	2009.12.	일부	악취방지법	3	②	⑥	일부 중복
11	2009.12.	일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②	⑥	전체

순 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중복
12	2009.12.	일부	소득세법	10	②	⑥	일부 중복
13	2009.12.	일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③		중복 없음
14	2009.12.	일부	지방세법	4	②	④	일부 중복
15	2010.1.	일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	4	①		일부 중복
16	2010.2.	일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①		일부 중복
17	2010.2.	제정	석면피해구제법	4	①		일부 중복
18	2010.3.	제정	장애인연금법	3	②	⑥	일부 중복
19	2010.4.	일부	지방세법	13	②	⑥	중복 없음
20	2010.4.	일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②	⑥	중복 없음
21	2010.12.	일부	지방세법	4	②	⑥	중복 없음
22	2010.12.	일부	소득세법	8	①		일부 중복
23	2010.12.	일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②	⑥	중복 없음
24	2010.12.	일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	5	②	⑥	중복 없음
25	2011.3.	일부	하수도법	9	②	⑥	일부 중복
26	2011.3.	일부	기초노령연금법	2	①		중복 없음
27	2011.3.	일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①		중복

순 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없음
28	2011.3.	일부	노인복지법	11	②	⑥	일부 중복
29	2011.3.	일부	자연공원법	7	②	⑥	일부 중복
30	2011.3.	일부	지방세법	3	①		일부 중복
31	2011.4.	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4	①		일부 중복
32	2011.4.	일부	노인복지법	6	②	⑥	일부 중복
33	2011.4.	일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7	①		일부 중복
34	2011.4.	일부	영유아보육법	10	②	⑥	일부 중복
35	2011.6.	일부	사회복지사업법	6	②	⑥	일부 중복
36	2011.6.	전부	아동복지법	7	①		일부 중복
37	2011.6.	일부	영유아보육법	5	②	⑥	중복 없음
38	2011.6.	일부	장애인복지법	2	①		중복 없음
39	2011.6.	일부	자연공원법	2	①		중복 없음
40	2011.6.	전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②	⑥	일부 중복
41	2011.6.	일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	2	①		중복 없음
42	2011.6.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3	②	⑥	중복 없음
43	2011.6.	일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4	②	⑤	일부

순 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중복
44	2011.6.	일부	고용보험법	3	②	⑤	일부 중복
45	2011.6.	일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3	②	⑥	중복 없음
46	2011.10.	일부	하수도법	2	③		중복 없음
47	2011.12.	일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48	2011.12.	일부	사회복지사업법	6	①		일부 중복
49	2011.12.	일부	영유아보육법	5	①		중복 없음
50	2011.12.	일부	노인복지법	4	①		일부 중복
51	2011.12.	전부	사회보장기본법	3	①		일부 중복
52	2011.12.	일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②	⑥	일부 중복
53	2011.12.	일부	소득세법	6	②	⑥	일부 중복
54	2011.12.	일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②	⑥	중복 없음
55	2011.12.	제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6	①		일부 중복
56	2011.12.	일부	약취방지법	2	②	⑥	중복 없음
57	2011.12.	일부	장애인복지법	6	②	⑥	중복 없음
58	2011.12.	일부	지방세법	4	②	⑥	일부 중복

5. 제18대 국회 대안 중 구성정책에 해당하는 법률안

순 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1	2008.12.	일부	군무원인사법	2	①		중복 없음
2	2008.12.	일부	지방공무원법	4	②	⑤	일부 중복
3	2008.12.	일부	국가공무원법	3	②	⑥	중복 없음
4	2009.1.	일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	②	⑤	전체 중복
5	2009.1.	일부	국가공무원법	3	①		전체 중복
6	2009.1.	일부	지방공무원법	2	①		전체 중복
7	2009.2.	일부	공직선거법	7	①		전체 중복
8	2009.4.	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2	②	⑥	중복 없음
9	2009.9.	일부	검사징계법	2	②	⑥	중복 없음
10	2009.12.	전부	전자정부법	2	②	⑥	중복 없음
11	2009.12.	일부	공무원연금법	9	②	⑤	일부 중복
12	2009.12.	일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	②	⑤	일부 중복
13	2010.2.	일부	국가공무원법	2	③		중복 없음
14	2010.3.	일부	군인사법	2	①		중복 없음
15	2010.4.	일부	정부조직법	2	②	⑤	전체

순 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중복
16	2010.9.	제정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 한 특별법	8	①		전체 중복
17	2010.12.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 에 관한 특별법	4	①		전체 중복
18	2010.12.	일부	공무원연금법	2	①		중복 없음
19	2011.3.	일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 할구역에 관한 법률	4	②	⑥	일부 중복
20	2011.4.	일부	군인연금법	3	①		일부 중복
21	2011.4.	일부	군인사법	4	②	⑥	일부 중복
22	2011.4.	일부	교육공무원법	3	①		중복 없음
23	2011.4.	일부	국가공무원법	8	②	⑥	일부 중복
24	2011.4.	일부	지방공무원법	7	②	⑥	일부 중복
25	2011.4.	일부	경찰대학 설치법	3	②	⑥	일부 중복
26	2011.4.	일부	경찰공무원법	3	②	⑥	중복 없음
27	2011.4.	일부	전투경찰대 설치법	4	②	⑥	중복 없음
28	2011.4.	일부	국회법	7	①		일부 중복
29	2011.6.	일부	국군조직법	2	①		전체 중복
30	2011.6.	일부	군인사법	2	①		전체 중복
31	2011.6.	일부	교육공무원법	5	①		중복

순 번	제안 연월	개정 형태	법률명	통합 개수	대안 분류	대안 재분류	중복 여부
							없음
32	2011.6.	일부	교육공무원법	4	①		전체 중복
33	2011.6.	제정	국립외교원법	3	①		일부 중복
34	2011.6.	일부	공무원연금법	7	②	⑥	일부 중복
35	2011.6.	일부	경찰공무원법	3	①		전체 중복
36	2011.6.	일부	소방공무원법	2	①		전체 중복
37	2011.9.	일부	교육공무원법	4	②	⑥	일부 중복
38	2011.12.	일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 에 관한 특별법	3	①		중복 없음
39	2011.12.	일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	②	⑥	중복 없음
40	2011.12.	일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2	①		전체 중복
41	2011.12.	일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 할구역에 관한 법률	2	①		중복 없음
42	2011.12.	일부	교육공무원법	6	①		일부 중복
43	2011.12.	일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5	②	⑥	일부 중복
44	2012.2.	일부	국가공무원법	2	①		중복 없음
45	2012.2.	일부	국가인권위원회법	6	①		일부 중복
46	2012.2.	일부	지방공무원법	6	②	⑥	일부 중복

Abstract

Study on th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s overlapping legislation initiative

Lee, Sanghyu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legislative power is belonged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in the history of Korea, the administration has led the legislative policy process and the National Assembly did not function correctly as the lawmaker. After Democratization,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initiative overwhelms the government to the quantitative. But it is pointed out that in contrast to the quantitative increase, the quality of National Assembly's bills are still lower than the governmental bills.

Previous studies on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initiative argued for the lower approved rate of th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s bill, instead of focusing on the quality of the bill itself. However, this study analyze the quality of the actual bill and process

of lawmaking, to reveal the real qualitative difference between th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s bill and the administration's bill.

First, this study targets the 937 alternative bills submitted to the 18th National Assembly, to analyze the status of overlapping legislation initiative, designated as the cause of low quality of th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s bill. To the next, according to the Lowi's classification, this study analyze relationship with the type of policy and overlapping legislation initiative.

According to the results, members of National Assembly's bills show lower quality than the administration's bills, and members of National Assembly's bills replicate each other. In addition, look at the results of the overlapping initiative by policy type,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on gladly provide benefits to specific groups by the law. Also, th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are willing to submit overlapping initiative although a particular group to bear the costs, if the law form a favorable opinion or general reputation, that could be helpful to the vote. Meanwhile, the administration is advantageous to adjust specific costs and benefits, and leads to an agreement among stakeholders.

This study through the analysis shows members of National Assembly's bills need to be further improved in quality. And the overlapping legislation initiative is th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s strategic choice to achieve re-election, so to reduce overlapping legislation initiative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s bills,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the administration, rather than controlling legislation progress.

Keywords : National Assembly, overlapping legislation initiative,
policy type, approved rate of the bills

Student Number : 2009-23680